

# 2007年度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錄

國政監查

(임시회의록)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科學技術部·氣象廳

日 時 2007年11月1日(木)

場 所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17일 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7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 19일에는 기상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러한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들을 재점검하면서 시정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와 수감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국정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자료 제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 등에 대하여 지적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해당 기관의 감사 시에 이미 받았으므로 오늘은 이를 생략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과학기술부총리와 기상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듣기 전에 지난 22일 국정감사 물의로 국민들한테 죄송한 것도 죄송하지만 특히 어느 위원회보다도 정말 열심히 감사를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날짜로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 준비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우리 과집 직원들은, 과기부 위원들은 한 점 부끄럼 없다는 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국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서 금방 국감 중에 저희 부의 관련 기관이 연계되어서 발생된 물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유감과 함께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이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과 김태환 전 간사님의 아픔에 더더욱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에서는 저희들의 과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금번 물의가 원만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정기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 부가 추진한 제반 과학기술 시책들에 대하여 엄정히 평가해 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학기술부와 소관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조

속한 개선조치가 가능한 사안들은 신속히 시정해 나가고 있는 한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층적 검토와 기획 마련을 통하여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소관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21세기 과학기술 강국, 선진 일류국가 구현이라는 시대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배** 과학기술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만기**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은 지난 10월 19일 기상청 본청에서 국정감사 현장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상업무 전반에 걸쳐서 고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기상발전에 반영할 것이며 이는 기상청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기상청은 예보능력 향상과 기상재해의 사전 대응 체계 강화로 국가의 위기 관련 능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상청이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기상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언과 충고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배** 기상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며 부족하신 위원님들께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비교섭단체의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대통합신당 유승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혹시 증인으로 되어 있는 핵융합연구소의 신재인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선임연구단장 권면** 한 시간쯤 늦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선임연구단장입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의해서 금일 출석해야 되는 증인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과총 주최의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방 한 20분 전쯤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인데 그것도 20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하여 출석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총리의 답변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20분 전쯤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오늘 11월 1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과기총, 한림원, 공학한림원, 사이언스TV가 공동 주최로 대통령 선거 관련한 각 당 후보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금 20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의 답변과 함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배**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안 오신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하여튼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적절한, 합법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위원장 임인배** 다음에는……

○**유승희 위원** 국회법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면 동행 명령장을 즉각 발부해서 출석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인배** 예, 수석한테 지금 출석하도록 하고 안 하면 국회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하실, 비교섭단체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위원** 국민중심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입니다.

먼저 오늘 첫 질의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모두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전 국감에서 있었던 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피감기관과 식사를 하고 일부 술자리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구설수에 올랐고 물의를 빚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뼈아픈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거듭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석전문위원, 증인은 아니지만 참고로 마이크에까지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인배** 이 앞의 부분은 질의시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아니, 질의로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로 넣으셔도 됩니다. 모자라면 오후 추가질의 때 나머지 하면 되니까요.

우리 김 수석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나갈 때 여비, 숙박, 식비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국회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같으면 지금 이게 국회사무처에서 누구한테 지급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우리 위원회로……

○**류근찬 위원** 행정실로 들어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행정실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 앞에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여비규정에 의한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 것들은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이게 위원님의 여비고 위원님의 식비고 위원님의 숙박입니다’라고 지급을 안 해 주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안 합니다.

○**류근찬 위원** 그게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관행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모아서 행정실에서, 우리 과기정위위원회 수석실이든 전문위원실이든 간에 행정실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임인배 위원장, 신상진 간사와 사회교대)

○**류근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전에 국감을 갔을 때에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이 돈이 처리되었던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돈 범위 안에서 식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용한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한테 지급을 하면 국회의원들끼리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후에 피감기관과 정산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피감 주관기관에서 지출한 다음에 우리 행정실에서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 여비·식비 이것을 보내줘서 정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류근찬 위원** 그게 관행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지금까지 그게 관행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우리

가 대전에서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그 정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때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정산절차가 통상 언제, 얼마 후에 끝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지금 기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 나머지 실비 정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위원회의 경우에는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을 때 관행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그게 관행이지요? 지금까지 해 온 관행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피감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대접받거나 술을 대접받는 그런 관행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누가 돈을 내주면 그에 필요한 국회의원들 몫을 우리 행정실에서 보내주는 게 관행 아니었나 그거예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을, 얼마만큼 참여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보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정산, 정확한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나 향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증언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엽 예.

○류근찬 위원 알았습니다.

자, 과기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가 지난 27일, 28일 이틀 동안 이 건으로 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감사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감사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을 내려보냈습니다.

○류근찬 위원 몇 명이나 내려가서 며칠 동안 실태파악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몇 명 내려갔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류근찬 위원 지금 중간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구두로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다는지, 아니면 신문보도가 과장·추측성 오보라든지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번에 내려보냈을 때도…… 언론보도가 낮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제가 그 이튿날 바로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로 보면 예를 들면 2500만 원……

○류근찬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말씀만 대답을 해 주세요.

특감 결과 중간보고를 받으셨는데, 제 질문은 신문에 난 내용과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의 차이점이 뭐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리 감사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내용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것하고 우리가 얘기한 것하고 계량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류근찬 위원 차이가 있더라 그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류근찬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거나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문 내용과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직은 안 했습니다.

○류근찬 위원 왜 그 조치를 아직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은 중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기정위원회 전체 위원, 특히 저를 포함한 3명의 위원들이 지금 대단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신문에 난 실체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수시로 국민을 향해서 ‘신문보도는 이렇게 됐는데 이러이러한 게

실체더라'라고 국민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나 하면 국회의원들이 항응을 받았거나 접대를 받았다면 그 주체는 과기부와 과기부 산하 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대고 대접을 해 준 사람이 그것은 신문에 난 것하고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수시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과기부는 나 몰라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나 몰라라가 아니고요. 아까 류근찬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인사말씀 베풀어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 관계되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류근찬 위원 이틀 동안 신문에 날 때 과기부와 과기부 산하 연구원이 입도 빵긋 안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주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체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2500만 원이라고 나오면 '2500만 원은 턱도 없는 얘기다', '턱도 없는 돈이다'라고 누군가가 나서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 6명이 밥을 먹었고 3명이 술을 마시러 갔다고 하는데 그 외에 아는 사항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뒤에서 카드를 내서 돈을 지불하고 안내하고 하는 사람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다든지 안 맞는다든지 어떤 의사표시를 해 줘야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일부 불식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억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연루된 것이 있어서……

○류근찬 위원 하여튼 이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이 부분은 실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 동아일보를 고소했고 또 우리 세 위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과기부가 증언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희들이 확

실한 입장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나눠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2개의 몸통입니다.

하나는 1차로 감사를 끝내 놓고 저녁을 먹은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를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출연연구원장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추측보도가 일어나서 3명 중에 2명이 모텔에 갔다 하는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 두 가지만 규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신문에 그날 출연연이 계산했던 돈이 170명분 700만 원이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 1차 보고받으신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문서상으로 못 받았습니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70명이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국감 끝나면 보통 한 170명, 200명이 같이 밥을 먹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글썽요……

○류근찬 위원 우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만약 170명분 해서 700만 원이라면 1인당 한 4만 원쯤 되는데 국회의원은 거기서 밥 먹은 분이 6명입니다. 보좌관들, 비서진 한 열댓 명 해서 기껏해야 우리 국회의원실 쪽은 한 20명인데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80만 원 정도어치의 식사를 그 당시는 대접받은 거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나중에 정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산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머지 620만 원은 누가 먹은 겁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게 구체적으로……

○류근찬 위원 아니,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무슨 저녁을 국회의원 6명이 700만 원어치나 먹어?” 이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70명이라고 기사가 나왔지요.

○류근찬 위원 그것은 접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출연연이 국정감사 끝나니까 회식한 겁니다. 회식한 돈이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도 지금 한꺼번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실체를 전부 밝혀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해서 저도 아주 창피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규명해야 될 실체가 만찬 후에 A라고 표시된 술집에 가서 저하고 다른 두 위원과 또 대여섯 분의 기관장들이 잠시 술을 마셨던 부분이지요. 술을 마신 것은 저는 부인 안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돈이 68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보도에 그렇게 나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한 10명 가까이 됐을 텐데 68만 원이라는 돈이 10명이 술을 마시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돈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계산한 사람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몇 시에 나갔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류근찬 위원** 그런데 섭섭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3명 중에 1명은 일찍 가고 2명이 위에 있는 모텔까지 갔다고 그렇게 신문기사에서 떠드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런 일 없다. 우리가 그 돈 계산한 일도 없고 우리가 몇 시 몇 분에 나가는 것을 배웅해 주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나는 거기 끼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 중에 있어요. 다 보입니다.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분명히 몇 시쯤 내가 모셔다 드렸다는지……

아무리 주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술 먹은 비용, 모텔 비용까지 포함해서 68만 원이 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왜 일언반구 얘기를 안 해 주느냐 그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류근찬 위원** 국회의원은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표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인데

선거구민들이 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동아일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심경을 토로한 기사를 제가 읽어 봤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런 의혹 덩어리 속에 있는데 정작 주관하고 주최하고 접대한 주체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어요. 27·28일 감사를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 신문에 난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실제 관계를 국민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국회의원과 우리 위원회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이 부분은 증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현장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검찰의 조사나 사직당국의 조사와는 별개로 과기부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밝혀진 대로 소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류근찬 위원** 그것은 별도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류근찬 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변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변재일 위원** 지금 류근찬 위원님이 진짜 피땀 흘린 절규처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대전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정감사 준비과정, 국정감사 수감과정에서 집행한 예산의 내역을 비목과 금액과 실제 집행내역으로 분류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니까 현재까지는 힘드실 것 같은데 내년도 과학기술부와 출연연구기관들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과학기술부장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오늘은 과기부에 대한 종합점검 감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부수해서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에 한국공학한림원이 출간한 ‘창조적 혁신으로 새 성장판을 열자’ 이런 정책총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받았습니다.

○박성범 위원 읽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직은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 내용 중에 골자를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시장친화적 마인드와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창조형 기술혁신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기술혁신정책에 있어서 관제탑 역할만 하고 민간 부문과의 상생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 투자의 양적 확대에 따라서 자원배분을 관료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전문가 그룹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된다’ 이게 한국공학한림원의 정책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주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범 위원 감사기간을 통해 가지고 본 위원님이 느낀 것은 R&D 예산도 확대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구기관도 많이 늘어나고 연구과제도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과기부 연구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다…… 말하자면 자료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과학기술의 핵심은 역시 정확한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사업추진기관하고 사업 평가기관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에서 마치 그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 같이 통계자료를 내고, 또 그것도 각각의 연구기관이 서로 다 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하면 상당히 양도 많아지고 건수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데이터 정리조차도, 또 업무 구획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부총리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선 아까 말씀하신 공학한림원에서 얘기한 원칙적인 얘기는 저도 찬동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주관한다든가 관료들이 주관한다든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가 주관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민간이 주관할 수 있는 분야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합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이런 대목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일선 연구개발자가 중심이 되는 인사채신책을 강구해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풍토를 조성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각각 떨어져서 하기는 하지만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개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 풍토를 좀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 개인연구, 창의연구에다가 32%를 증액시켜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범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박성범 위원 또 제가 일견한 것…… 다 구체적으로는 안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기술하고 경제활동을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기술연구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물론이지요.

○박성범 위원 결국은 그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인데 그 연계가 대단히 미흡하다, 또 더욱이 그게 미흡하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따로따로 가는 느낌이다 이런 지적인데, 이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간사, 임인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범 위원 과기부의 각 출연연구원이나 기타 기관의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이 문제가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

고 아주 부실하게 자료를…… 더욱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신경 써서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냥 국감만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에서 그야말로 지적 안 되면 용케 넘어가 버리는 풍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내년부터는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만들고……

과학기술의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총리께서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이런 부실한 자료가 여러 건 지적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핵물질 관리의 총체적 부실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다 지적이 됐고 한수원에서 지적이 되고 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사고가 생겼으니까 3개월 뒤에 발견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추정만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국민의 건강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원자력연구원장이 그 직을 내놓고, 그 타이밍에 만들어 낸 6대 중점과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제가 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놓은 6대 중점과제인지, 실제로 실효성이 있게끔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만든 자료인지, 제가 보기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여섯 가지를 다 보게 되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러나 시간이 한 반년 이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하게 다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는 이해는 하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비판받을 것은 받지만 실효성이 있는 과제를 내놓아야 되는데 중점과제라고 내놓은 것이 아주 서둘러 가지고 미봉책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주의 깊게 점검하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한수원의 경우 회계장부하고 실제로 창고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 숫자하고 상당

히 많이 차이 나는데, 지난번에 한수원 사장이 안 나와서 본부장인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것은 수기로 하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차다” 그러는데 오차가 있을 게 따로 있지 핵 관련 물질에 대한 장부의 오차가 그렇게 많이 1000개, 또 저준위는 30개 이렇게 나는 것은……

그 관계 보고받으시고 부총리께서 시정조치를 취한 것 있으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그 6대 과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데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RFID라든가 핵물질 통합저장관리시설 건립 이런 것들은 즉각 즉각 진행해 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품연구원은 감염성폐기물 관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법에 보면 15일 이내에 폐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벌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20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전부 당일 폐기로 되어 있어요. 당일 폐기가 될 수 없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녁 5시까지 돼지 잡아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퇴근시간인데 당일날 그게 어떻게 폐기가 됩니까?

이것 보고받으신 일이 있으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직은 없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러니까 자료의 부실과 더불어서 자료의 허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현장확인을 안 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종 감염성폐기물을 20년 동안 모두 당일 처리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 당일 폐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다 해부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저녁에 끝났는데 그게 당일 처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이 넘어갔는데 부총리께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되지요. 15일 이내에만 처리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하러 당일 처리로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염성폐기물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감염성폐기물은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박성범 위원 양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박성범 위원 저도 이게 얼마 나오겠느냐 했는데 하루에 몇백kg씩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시정을 해도 좋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박성범 위원 과기부 관련 하나만 더……

과학TV인데 감사기간에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고 반대에도 부딪혔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총리께서는 시간이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계속 하실 생각을 피력하셨는데……

기상청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는데 지금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엄청 높으니까 차라리 외국식으로 기상정보 채널이 생겼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자세한 기상정보를 알려주고……

그런데 국민접촉도가 낮은 사이언스TV로 나가는데 기왕에 시작했으면 여기에 기상청을 참여시켜서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넣어 가지고 그것으로 차라리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기상 관계는 찾아서도 봅니다, 자세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박성범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사이언스TV의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한테 과학 정보, 과학 마인드를 늘려 주던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이 다 죽어 버렸어요. 돈 안 주니까 그것 못 하지요. 이것이 내가 보기로는 과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혀 가는 데 그래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다 죽여 버리고 보지 않는 사이언스 채널로 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정히 배분해서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축소를 하더라도 좀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지난번에 답변 올린 것처럼 지상파방송의 주요…… 저희들

이 개입을 할 것입니다.

(임인배 위원장, 신상진 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범 위원 그다음에 감사기간 동안에 보면 핵심기술 해외유출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방비책이 좀 소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국부의 큰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산자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과기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반대가 아니고요. 국가보안적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되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외부의 연구기관이라든가 하는 것과의 교류가 경직될까 봐서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다.

○박성범 위원 기상청장 나와 계시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나왔는데 결국은 거기서 해명자료로……

울산공항 윈드프로파일러 도입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라디오존데 도입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지요?

○기상청장 이만기 예, 그렇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왜냐? 경찰 내사는 내사이고 그 사람들이 내사하는 것은 형사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뇌물수수가 있지 않았느냐,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기상청이 이것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구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기상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기상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형사적인 문제는 내사 중이니까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다 손놓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단 말이지요.

○기상청장 이만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박성범 위원 아니지요, 개개인이 비리를 저질렀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

로 해 가지고 들어온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기상청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기상청장 이만기**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지금 준비를 할 문제가 아니지요. 장비 도입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사직당국의 내사까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당연히 기상청에서는 이 장비의 성능은 확실하나, 이게 제대로 설치되었느냐 여기까지 접근을 해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이만기** 지금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차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존데 문제는 저희가……

○**박성범 위원**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이 뭔지 이해하시지요?

○**기상청장 이만기** 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박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심재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번 기초기술연구회하고 산업기술연구회 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난 3년간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기관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외자 구매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국감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액수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자·외자 공히.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금은 5000만 원 이하, 또 2006년 말까지는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액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파악하려고 입찰공고서라든가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는

데 일부는 왔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소도 그렇고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소도 그렇고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소의 수의계약을 보면 내·외자가 지난 2004년부터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00억에 달하는 내·외자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도 보면 역시 거의 1000억에 가깝습니다. 항우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한 500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연구회도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데는 한 600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2004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도 300억 정도를 2005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각 산하 연구소들이. 어느 정부의 산하기관이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일부 들어온 자료를 보면 대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우선 입찰공고라든가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게 기능(function)이 요구되지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사양(specification)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심지어는 디멘션(dimension)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기계면 기계, 사이즈까지 이렇게.

그런데 내자일 경우에도 국내 업체들이 경쟁 업체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유일한 업체는 없을 겁니다, 외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나 사양이나 사이즈 같은 것을 계약서에 넣고 입찰공고에 내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공급자나 제조자는 아마 한 회사밖에 없을 겁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극히 제한되었지요.

○**심재엽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입찰공고를 내도 유찰이 되고 단독입찰이 되고, 단독입찰되다 보니까 다시 재입찰하면 또 역시 단독입찰되면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이라면 물론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고 우수한 품질을 싸게 사라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은 그 이상 되는 금액은 공개 경쟁입찰 해서 이런 법칙에 맞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심재업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세 기관 합치면 지난 3년간에 거의 한 2300억 됩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인 지금까지. 그런데 과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혁신본부 차원에서도 기초기술 또는 공공기술, 매년 예산 배정할 때 계속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업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하시겠지만 집행하는 것이 위법사실이 있는지, 말하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혁신본부,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혁신본부에서 이 부분을, 산하기관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종구 감사는 아니고요, 수시로 상황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업 위원 어떻게요?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종구 감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수시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재업 위원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법률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을 만드는 데는 세계에서 이 업체밖에 없다 또 국내에서 이 업체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과연 세계에서 그 업체밖에 없는지, 또 국내에서 과연 그 업체밖에 없는지를 한번 조사나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를 들면 사우나(SAUNA) 같은 것, 그런 것을 구입할 때는 딱 스웨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재업 위원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지금 제출한 자료가 아까 말씀대로 무려 이천삼사백 억 되는 산하기관들 전체 수의계약 액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는 상당히 범용성 있는 기자재가 많이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기를 산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범용성 있는…… 그런데 그 업체가 만들어내는 기능 또는 사양, 하다못해 기계 크기까지 적시해 가지고 이 크기에 맞지 않는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입찰 공고라든가 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나 계약서를 보면 아주 그 회사만 들어올 수 있게끔 입찰공고나 계약서가 돼 있어요. 한 1cm나 2cm 기계 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높이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이야 필요한 기능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양이 레인지(range)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연구장비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그 장비만을 국한해 가지고 공고를 내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그러한 불만이 우리 의원실에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에서 입찰공고를 내는데, 물론 처음에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견적을 받고 공고를 낼 때는 딱 한 군데를 정해서 낸다거나 아니면 처음 견적 받을 때부터 배제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 익숙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싸면서도 그런 장비가 있는지를, 기자재가 있는지를 찾아서 공개 경쟁입찰해서 그런 기자재를 사라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심재업 위원 그러니까 과기부의 산하기관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물론이지요.

○심재업 위원 물론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심재업 위원 저는 액수가 너무 커서 놀랐기 때문에, 제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은 수의계약 액수가 100억, 200억 정도 수준 되는 것도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행이, 이것도 하나의 관행으로 누적이 돼 왔고 또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비는 정말 그 제작 회사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경쟁업체들이 싸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이라든가 또는 이 업체밖에 없다는 이유로 입찰공고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공고도 없이. 이유가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은 감사를 하면 나오지요, 여기밖에 없는 건지 또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혹시 그 업체 물건만을 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감독기관 내지는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이 그 사이에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 입찰공고든지 계약서 사본을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방대하겠지만 출연기관별로 보면 그렇게 방대한 자료는 아니거든요. 이 많은 출연기관들이 각자 자기들이 계약을 했거나 수의계약한 것을 주면 되는데 이것 제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국정감사가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고, 여기에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러한 관행이 적법한 관행이었느냐 또 적법한 관행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감독기관에서,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바로잡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물론 진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큰 액수가 수년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이전 건이나 2004년 이전 건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아주 근자 3년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전에는 계속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액수에 비해서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또 내용을 들여다볼 적에는 충분히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단독응찰 또는 단독계약을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번 감사를 받아 보십시오. 받아 보시면 아마 좋은 방안 제시가 될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심재엽 위원 수의계약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PBS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국감을 위해서 3개 연구회의 산하기관 전체에 본 의원실에서 설문을 해 봤습니다. 설문을 한 이유는 R&D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전체로 2008년 예산에서 10조가 넘어갔다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러는데, R&D 투자가 계속 정부에서 많이 됴에도 불구하고 특히 과기부 소관 출연기관들의 특허 건수라든가 또 기술이전 건수라든가 상용화 건수는 거꾸로 상당히 미진하고 부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R&D에 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서도, 제가 기초기술연구회 때는 구체적으로 건수와 액수를 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가 밝힐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밝힌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R&D 투입비용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연구기관 출연기관 공히 PBS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PBS의 문제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생명연구원 같은 데, 공통된 얘기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에 응모하는(평균 3, 4개) 등 연구효율성 저하 문제로 인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별 과제 확보, 인력 운영 등으로 기관정책 목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장기적이든 아니든 고유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서너 개 과제를 따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중점적으로 고유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인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허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술이전도 마찬가지이고?

또 한국전기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사업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KIST도 그렇고 산하기관 전체 인력분포를 보면 석사·박사 학위 소유자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거의 99%인데,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연구라는 명분은 있겠지만 이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의 인건비 때문에 연구과제를 따 오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감 때…… 자기 연구원의 고유연구 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연구과제도 따 와 가지고 연구를 한다 이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애기지요. 그래서 인건비를 충당한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도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10조가 아니라 20조가 들어가는 R&D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다면 특히 건수라든가 기술이전이라든가 또는 상용화 이게 있을 수가 없지요, 하루이틀에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것이니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자기가 연구했던,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특허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인건비, 자기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부 설문한 게 있습니다, 연구원들을. 거의 공통적인…… 그래서 PBS제도는 이제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과 기관에 맞는 고유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이 장기 과제이든 중기 과제이든, 그로 인해서 특허를 많이 내고 기술이전을 많이 하고 또 상용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 때 한 결론입니다. 한번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대리 신상진 짧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사실은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서 PBS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야겠다 해서 지금 많이 고쳐졌습니다. 심지어는 보따리장사를 없애 버리자, 인건비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도 연구비를 따 오고 하는 것은 지양하자 해서 사실은 기관 고유사업비를 자꾸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40%까지 올려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적 연구비를 확보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그것도 조금 미진하니까……

○심재엽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조사에 의하면, 'PBS 제도가 존

속하더라도 70%~80%까지는 인건비를 보장해 줘라' 그것이 전 연구원의 공통된 요구사항입니다. 40%는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그 이상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수상 분자와 분모의 관계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상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톱 브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심과제 거기에 집중 좀 하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지금 톱 브랜드 프로젝트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아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좋은데요. 지금 우리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혁신본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급자 위주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연구원들의 수요자 입장의 사고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절충점을 찾으셔야지 지금은 완전히 공급자 위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수요자가,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만 그러시니까 이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 위원 민주신당 경기도 의정부율의 강성종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먼저 해외 우수 R&D 공동연구센터 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개 부처가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04년부터 우리 과기부에서는 총 10개 공동연구센터를 유치·운영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가장 큰 목적은 국내 연구역량 강화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강성종 위원 그리고 효율성 증대하고 고도화하고 기술이전……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기술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종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전…… 이것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성공 전제조건에는 인적교류가 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강성종 위원 인적교류와 또 한 가지는 상대국 연구기관의 직접적인 투자, 현물이나 현금의 직접적인 투자가……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서로 간에 연구개발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조건, 직접 투자와 인적교류와 기술이전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나 다 공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술이전, 10개의 센터에 대해서 기술이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봤을 때…… 카벤디쉬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바텔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기술이전 하나도 안 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성종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텔-KIT공동연구소 아시고요. 프레드 허치슨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브라운호퍼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기술이전이 한 개만 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한 개 되어 있습니다.  
 ○강성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사실 아주 미흡합니다.  
 ○강성종 위원 지금 연구역량 강화, 고도화,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R&D 허브 구축의 어떤 토양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말씀이신데요. 10개 센터 중에서 기술이전이 하나도 안 된 데하고 기술이전이 하나밖에 안 된 데가 50%입니다. 여태까지 투자한 게, 2004년부터 해 갖고요. 물론 바텔 같은 경우 1년밖에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게……

일단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지표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외국 연구센터까지 우리가 공동 운영하면서 이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여쭙 보고 싶은 것은, 같은 내용을…… 제가 2005년 6월 15일날 임시국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상대국 연구소의 현물이든지 아니면 현금이든지 직접 투자가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연구인력의 국내 상주를 유도해야지만 해외 우수 공동연구센터가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나 우리 부총리께서 같이 공감하신 거나 똑같은 내용을 바로 2005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과기부차관님께서 언론에 보도를 하는데 “일부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R&D센터를 촉진하는 사업모델을 낼 것을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요.

2006년에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께서, 직전 장관님께서 우수 연구기관 유치활동사업 신규과제 공고를 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항목에서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상주 파견인력 및 전담 연구인력을 확보하겠다, 해외 연구기관의 현물이든지 현금 투자를 확보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직전 부총리이고 차관이시지만…… 이게 2년 전에 국회의 이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2005년 이후에 지금 선정된 8개의 공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 대비 해외 투자를 봤을 때 지금 미약하다고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23.5%밖에 안 됩니다. 이 투자에는 현금과 현물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상주는 총 연구인력의 대비로 어떻게 되느냐, 투자가 안 되었다면 최소한 인력이라도 와야지, 그래야지 기술 연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교류밖에 안 되고…… 5.1%입니다, 상주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명도 안 된 데가 몇 개이나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된 데가 여덟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돼요. 한 명 온 데가 두 군데 있고 두 명 온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면 전체 여덟 군데…… 제가 말씀드리고 차관이 말씀해 주시고 차관이 보도를 하고 공고 내용에 부총리 이름으로 다 나와 있는데도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력이 전무나 두 명이 하가 파견된 데가 여덟 군데에서 일곱 군데입니다.

이게 정말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우리 장관께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론에까지 내고 공고까지 냈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면서 정말 말씀하신 효과—연구역량 강화, 선진 기술이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몇 군데를 보면 정말 역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카벤디쉬 아시지요, KAIST하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04년부터 07년까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기부에서 지금 6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국 집행은 전무입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기술이전 하나도 안 되고 상대 연구기관에서는 돈 하나도 안 내고 과기부는 60억이나 내고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면서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KIT-바텔공동연구소를 한번 보면 05년부터 시작되어 갖고 결국 07년에 퇴출상태, 의미가 없어, 상실되어 갖고요.

프레드허치슨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그것은 제가 정말로 05년 임시국회 당시에 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재원 확보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실적 부풀리기 내용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할 것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정말 이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생명연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정부가 더 이상 돈 안 낼 수 있느냐…… 대전시가 매년 50억씩 해 갖고 3년간 150억 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랬습니다.

(신상진 간사, 유승희 간사와 사회교대)

○강성종 위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대전시가 얼마 지원한 지 아십니까? 16억입니다. 150억을 받아야 될 쪽에서……

제가 2005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느냐”, 아니 대전시에서 150억을 지불해야 되는데 16억, 10%밖에 못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서 투자를 못 받으면 국내에서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국내 지방자치단체한테 약속받은 것도…… 어떻게 150억인데 거기서 16억 받아서, 10% 갖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생명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10억씩 3년간 30억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냈습니까? 12억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이것 재원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부실할 거다, 결국은 정부에 부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목적이나 내용 취지를 확실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세한 계약들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이것은 정말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실적 부풀리기밖에 될 수 없다”……

지금 전체 사업이, 대전시에서 1년에 50억씩 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3년이 지나서…… 그리고 생명연에서 10억씩 해 갖고 180억 사업인데 지금 총 28억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에서만큼이라도 제대로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게끔, 국내도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국외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새고 있는데 국외에서 어떻게 연구인력들을 초청할 수 있고 상주 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과기부총리께서 목표가 있고 직접 개입하기로 하셨다면 정말 내실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관심이, 몇 년 전에도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내용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충분히 자신 있느냐”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번번이…… 아니, 신문에 광고를 하고 공고까지 하면서도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 대전시에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덕연구단지에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10%밖에 못 받으니, 150억을 받아야 되는데 16억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양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질적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 부총리께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 많은 여건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토양적인 것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되려면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주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주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부총리 체제니까 외국인에 대한 어떤 교육시설과 주거문화, 편의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지금 3개 부처에서 시작했는데, ETRI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기부 출연연이지만 또 정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도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적격 판정되고…… ETRI도 마찬가지예요. ETRI-캠브리지 공동연구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공동연구센터인지……

처음 출발할 때는 다들 멋있습니다. 신라호텔에 가 갖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는데 2~3년도 안 걸려서 완전히 퇴출당하고 종료되고……

이제는 이런 사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처가 공히 이런 명확한 기준과 목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종 위원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99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사업으로 총 22개 사업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강성종 위원 연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 예산에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지원사업이고 대규모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가는 정말로 프론티어입니다. 그래서 총 2조 7000억의 투입 계획을 잡고 있는데 05년에는 22개 중에서 6개가 산자부와 정통부로 사업들이 이관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강성종 위원 이것도 제가 04년 국감 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2004년 국감 때 22개 프론티어사업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국장이 정말 총괄적인 것을 하시니까 사무국장 자리를 봤어요.

그런데 공적인 2개 사업단을 빼고 20개 사업단을 봤을 때 과기부에서 퇴직하고 가신 분들이 열네 분입니다, 20명 중에서. 그것은 70%예요. 정부 출연연에서 3명이 들어갔고 기상청에서 1명, 외부 전문인력이 2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원칙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원칙은 법인화라고 할 정도로 프론티어사업단을 그렇게까지 외부에서 입김도 작용 안 하고 정말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화시키자고 법인화시키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과기부에서 20개 중에서 14개를 들어갔으니 이것은 자리 보전용 아니냐,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감에서 얘기된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부총리께서도 정말로 공개채용에 대해서 재고하고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적인 것을 보면 지금 4년이 흐르고 나서 현 6개 타 부처가 이관이 되었고요, 정통부하고 산자부에. 나머지는 16개 단을 보는데 2006년에 4개의 사업단이 새로 사무국장이 교체되었습니다, 4명이요. 아시지요?

지난해에 4명의 사무국장이 교체되었는데 분명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장관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이 3명이 똑같이 과기부 출신이 다시 파견이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1명은 지질연구원 파견직원이에요. 3명은 과기부 출신 퇴직자가 되고 1명은 지질연구원 파견직원이고, 국감에서 무슨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바뀌어야지요.

2004년도에 얘기하고 부총리도 당장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못 믿으면 속기록을 보시라고요, 아니면 제가 제 자료를 다시 다 드릴 테니까. 국감 지적사항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사항들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없이 며칠간 얘기하는데 몇 년간 얘기하는 게 지켜져야지요.

그리고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프론티어사업이에요. 프론티어사업은 10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프



론티어예요.

그런 사업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무국장들이 어떻게 자리 보전용으로 그냥 이런 모습이 똑같은 게 지적되는 것이, 4년 후에 똑같이 지적이 된다는 게 개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연구운영관리지침 제3조1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인 원칙에서 현 16개 프론티어사업단 중에서 법인이 몇 개 된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대학 네 군데가 맞추고 있습니다.

○강성종 위원 열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만 원칙이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원칙이라면 이게 운영관리지침 아닙니까? 지침은 그냥 지침서입니까, 참고서입니까? 분명히 지침 속에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던 것이 2004년 이후 4년 지나서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면 여기 동료 위원이나 본위원이 죽어라고 떠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규모 프론티어사업단들이,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프론티어들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도 보면 다 세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변경될 때마다 민간하고 같이 투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민간투자가, 초기 투자는 정부투자가 많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민간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차례나 예산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민간투자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텐데 민간투자는 줄어 들고 국고부담률은 더 증가되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큰 사업들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계속 변경되고 정부부담률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민간투자자들이 그만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간투자자들이 실효성을 느낀다면 더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계획성부터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강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성남 중원 출신 한나라당 신상진 위원입니다.

과학기술부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과학기술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기본 큰 틀에서 중요성과 해결책 한 마디만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꼭 과학기술 분야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장관께서 올해 2월 26일 날 매일경제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공계 기피현상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관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선 그래서 만든 것이 전 주기적 인력관리·양성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아에서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하나의 안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서 소위 과학기술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비전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그때 답변하신 말씀이 이공계에 한번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겠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선 예를 들면 과학영재를 길렀는데 그 과학영재들이 다른 방향으로 진학을 한다든가 진출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지금 우리가 가령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 쪽으로 많이 가고 사법고시로 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위 어렵다고 하는 과학기술분야를 누가 맡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기 때문에……

○**신상진 위원** 그것은 현상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그런 여건을,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비전에 맞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공계 순회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공계 대학생들을 모아 놓고……

○**신상진 위원** 이공계 순회특강이 그것을 극복하는,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중요한 것보다도……

○**신상진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역점을 뒀서 진짜 발로 뛰고 행동으로 보여 주는 실천이 어떤 것인지, 순회특강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선 인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과학영재교육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결국은 대우를 잘 받는, 이공계 공부하는 사람들이, 출신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출연연구소의 퇴직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만들고자 합니까? 언제 만들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08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위원님들께서……

○**신상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과학영재들이 학교 진학을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해결이 됩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 효과를 기대 보자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과학기술인력 영재를 키워서 외국에 있는 한국 인

력을 모셔 오는 것이나 자체 어린이부터 영재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나, 또 대학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이후에 과학기술자로 육성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장관님 말씀은 어떤 핵심이랄까 하나로 집중할 과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을 아직 과기부에서 선정하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목적 이것저것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이것을 하면 된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상진 위원** 더군다나 이공계 출신이시고 많은 과학분야에서 일하신 부총리께서도 그러시다면, 또 세월이 그냥 간다면 누가 또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제도를 만들어……

○**신상진 위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 각 출연기관의 연구소 현황을 봐도 과학자 또는 이공계 출신이 아닌 분들이 원장, 소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결국은 과학기술부 자체 안에서도 그러한…… 또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도 지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인원이 부설기관 인원 제외하고도 7월말 현재 267명이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170명인데 157%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런 비정규직 연구원이 퇴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하나,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규직 채용을 검토한다, 이것도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수준이지 뭔가 하고 있다가 실천으로 바로 행동 프로그램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올림픽아드에서 메달을 수상한 한국 영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50% 이상이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결국은 기초의 학보다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추적을 해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기부의 대책이 ‘그런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고 했더니 ‘대학 진학할 때 가산점을 의과대학에서 많이 주고 특전을 준다’, 그런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의과대학에 진학했을 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려금 지급도

동메달은 연 500만 원, 금메달은 800만 원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학교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특전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런 정도라든가 또 ‘올림피아드 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해 이공계 진학 홍보를 실시한다’ 그리고 ‘관련 대학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제도의 개선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대 진학 수상자들이 임상 분야가 아닌 기초의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수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요진 국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했을 때 온 대책이 현재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과기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과학재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검토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검토하고 모색하고 이러다가 참여정부 끝나고 장관님도 그다음에 퇴직하시고…… 또 장관님 하실지 몰라도 이게 모색하다가 세월 다 지나는 것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시고 또 과학기술자로서 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시고 이랬던 장관께서도, 장관이 부총리가 되셔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 힘이 많이 실려서 가는 제도하에서도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그쳐 버리면 정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입국을 향해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소위 수재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일단 사회적 의식의 차이, 그다음에 가치기준의 차이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 가치와 의식 차이는 제도와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만약에 이공계로 진학하면 먹고살 길이 확 보장되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신상진 위원 취업이 보장되고 다 된다 그러면 의식이 변하는 것이지요. 이공계 가지요, 가지 말

래도.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이 특강하시고 순회하신다는데 그것 백날 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 안 되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다 그럴 듯하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못 옮기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지금 좀 미흡하지만……

○신상진 위원 순회하실 시간에……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사이클도 표를 보셨겠습니까마는 그 사이클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그게 바로 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저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체제로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부총리 체제하에 이런 이런 일들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사상누각적이고 뿌리가 약하다, 뿌리를 내리고 근본을……

장관님이, 또 고위 공무원 분들이 특별히 내세울 게 당장 없어 보여도 탑브랜드 사업이니 뭐니 각 기관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거기다 이번에 국감 받아 보니까 내거는 것만큼 그렇지 못하고 부실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초를 닦는다는 심정으로…… 과학기술은 기초과학이라든지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력이 있어야 운동도 잘하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과기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영재에 대한 또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장단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없다 이거지요. 지금 검토·모색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솔직히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어려우면 그 어려운 점을 하나라도 해결해서……

올림피아드 수상자들 그것을 아까 교육부하고 하신다는데,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도 임기 다 끝나 가실 무렵에 검토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검토하겠다고 보다는 그 영재 문제는 지금 이미 국과위를 통과

하고 서면결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 하나는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 하나하나 구석구석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해결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부총리 체제라는 게 뭐니까? 교육부총리, 교육부, 또 여러 부처들하고…… 정말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을 때려치우고 좀더 과기부총리께서 중심이 돼서 관계 유관부처들하고 해 가지고 대학에 요청할 것은 하고 강제할 것은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대통령 하기도 싸우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 1명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또 고위공무원들도 이공계 출신이 한 30%, 20%밖에 안 돼요. 24%……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28%, 30%……

○**신상진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중국은 벌써 눈을 떠 가지고 후진타오 주식부터 전부 다 그렇게 편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중국보다 사실 땅이나 자원이나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총리께서 안이하게 하실 게 아니라 비서실장님도 하셨으니까 대통령께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만나서 가지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는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부처 장관들 다 모아라 그래 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특목고 없애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순기능적인 그런 것을 범부처적으로 부총리께서 앞장서서서 정말 깃발 들고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임기가 이제 끝나 가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초는 마련해 놓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 위원** 아까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으

로 증인 관련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승희** 신재인 소장 오셨습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선임연구단장 권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홍창선 위원** 아까 10시 좀 넘어서 홍릉에서 오는데 이렇게 멀어요? 국정감사에 증인이 참석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전에 원자력연구소장도 해서 국정감사가 뭔지를 다 알 텐데 부총리도 모르시고,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그래도 조금 우습기는 하네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1시 반경에도 도착할 예정이라는데……

○**홍창선 위원** 지금 저희가 무슨 홍콩 시간 쏘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실례입니다. 제가 전에 홈페이지에다가 광고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무시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홍창선 위원** 사표를 내고 자유롭게 국정감사에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러면 몰라도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아까 출발했다는 게?

○**위원장대리 유승희**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 끝내시고 나서 오후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논의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아침에 시작부터 위원장, 류근찬 위원님도 신상발언 같은 것을 하시고 같이 들으면서…… 그리고 국감 증인도 사전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러는 것인데 무단불참을 하고 온다고 그러면서 사실과 다르고……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세계경제포럼에서…… 그게 해마다 발표하는 것입니다마는 IMD 발표도 있고 늘 몇 등 몇 등 그러는데 유난히 우리 국민들이 석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성적표처럼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순위가 좀 뒤로 밀리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고소해하는 쪽도 있고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느낌이 다르지요. 오늘 보니까 어떤 언론은 퀘스천 마크도 붙이고 도대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경쟁력이 올랐느냐 그러는가 하면 여러 가

지 보도가 있습니다.

(유승희 간사, 신상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아무튼 날뛰기,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뢰성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과학기술경쟁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평가도 그렇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좀더 의미 있는 질적 성장을 하자 이러기는 합니 다마는 아무튼 정부에서 R&D 예산도 지난 몇 년간 거의 갑절이 올랐고, 물론 그런 와중에 우리 과학기술계가 효율성 있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경쟁력이 많이 상승되고 그러면 국제신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지요, 사실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도움이 되겠지요.

○홍창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이 금융계는 육십몇 등이에요, 은행업 분야별 랭킹에 보니까. 자세한 것은 저도 다 보지를 못하고 얼추 보니까 50~60등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처우가 있는데 금융계 재경부 산하 사람들은 7억에서부터 제일 꼴등이 몇억 이에요.

그 이야기가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산업은행 부장이 차관보다 출장비가 어찌고 그러니까 산업은행 대답이 ‘아, 무슨 소리예요? 다른 은행에 비하면 이건 별것 아닙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아무튼 조사를 죽 해서 보니까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회라는 조직 속으로 들어오면 그 당연직 이사가 기획예산처에도 있고 해서 장관 봉급이 얼마인데 대통령 봉급이 얼마인데 이런 마인드로 묶어 놓고, 그 바깥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사도 민간으로만 하니까 자기네끼리 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그 철벽같은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 12월에 또 이사회를 하는데 반드시 고쳐야 되고, 이사회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아무 내용도 없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도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기술부가 매우 수치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기관을 지적해서 좀 민망하기는 합니 다마는 전통적인 연구기관장들은 연봉

이…… 물론 어렵게 사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지요.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보다 많네’ 이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 몸값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구요.

제대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긴 것을 의원입법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거기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 수백 명 거느리고 있는 기관장 봉급보다 많은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적게 하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 줄줄이 대면 한이 없어요. 그것도 과기부를 벗어나면 산자부 산하, 정통부 산하…… 표로 제가 다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습니다. 재경부까지 갈 것도 없고, 재경부까지 얘기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친다니까요. 당신 무식한 소리 한다고, 다른 은행들 얼마씩 갖는지 아느냐고……

은행장을 제가 아는데 모 시중은행장이 굉장히 견실한 데인데 한 2년 전에 우리는 안 되겠다고, 너무 적게 받는다고, 다른 데 경영상태도 좋지 않은 데가 어떻게 어떻게 받는다고……

최근에 기업도 좀 돈벌이 되는 데는 CEO들 스톡옵션 해 가지고 이제는 그 출신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우리가 연구비도 증액하고 환경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부총리께서 이번 12월 이사회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전임자께서도 약속했는데 그만 두시고 우물우물 대고, 전에는 즐기세포 때문에 연말을 또 우물우물 보냈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홍창선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달탐사위성을 이웃 국가에서, 일본에서는 한 달 전에 가쿠야를 발사했고 중국은 지난주에 창어 1호를 발사했고 또 인도도 내년 초에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한다 그러는데 물론 남이 발사한다고 우리도 꼭 발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달 착륙한 다음에 거기서 돌 하나 들고 오고 뭐 있었느냐 이런 말씀

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하고 달리 자원 문제라든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 과학기술부도 우주개발진흥종합계획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합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먼 장래에 이러한 로드맵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번 무엇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아주 시의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실천계획을 준비해서 제 방에 시안을 갖다 놔습니다. 이것은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놔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주위원회에서 확정지어서 갖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창선 위원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이게 얼핏 보면 엄두가 안 나는 거라 말도 꺼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우주종합계획도 어떻게 보면 대포동 덕분입니다. 우리는 뭐하는 거냐고 언론에서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시작한 겁니다. 전 같으면 턱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여기저기서 발사를 하니까 아마 과기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셨을지 모르는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해 놔습니다.

○홍창선 위원 이제 슬슬 책상 위에 꺼내 놓고 얘기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학재단 국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ERC나 SRC나 100여 개 하는데 늘 선정되는 분야만 선정이 돼요, 평가위원들이 큰 분야 사람들끼리만 모이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분야를 전에 가끔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재작년에도 이 점을 말씀드렸는데 고위험·혁신적 연구사업이라든가……

항공우주산업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학교가 몇 개 없으니까 이런 것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른 분야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속에서 하니까 다 올라가다가 그 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부총리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러한 모

든 것을 잊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러겠습니다.

○홍창선 위원 늘 국회에서 뭘 얘기하면 한번 서로 질의답변하고 슬쩍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아침 회의 직전에 증인이 곧 떠났다고 그러는데, 벌써 도착했을 시간이 지났는데 사회자가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도착했어요.

○홍창선 위원 오셨어요? 어디 오셨습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장 신재인 죄송합니다.

○홍창선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장도 하시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여러 번 받아 보셨잖아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결석계 같은 것을 위원회에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내지 않고 있다가 오전에 부랴부랴 났다 이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장 신재인 죄송합니다.

○홍창선 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부총리께서도 모르고 계시니까 임기말에 과기부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전에 행사 하나 하는데 징계를 하라느니 이런 공문을 행사 전에 보내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많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건은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을 받고도 그렇게……

거기 모인 사람도 많을 테고 그만큼 하면 신재인 박사님 인지도는 충분히 됐을 텐데 그렇게 안 오셔 가지고 아침부터 다른 위원이 ‘왜 증인이 다 참석도 안 했는데 보고가 없느냐’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무슨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미리 그것을 내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다 그거지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장 신재인 죄송합니다.

○홍창선 위원 제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질의할 것들이 오늘 조금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시간이 가

서.....

지금 연구할 때 협약들을 하고 이러는데 대학이나 연구소가 기업하고 할 때 보면 연구비를 준다는 ‘갑’과 ‘을’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자기네가 갖고 여기는 연구비만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당한.....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관심을 갖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홍창선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너무 입시 방편으로만 흘러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새 선거 때가 되면 자꾸 민원이 많으니까 다급하니까 그것도 해 준다, 그것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과학고등학교를 앞으로 과학영재학교로 돌리겠다는 것을 보면서 과학고등학교가 그런 문제가 되어서 과학영재학교가 생겼고 그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름만 바꾼 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특목고와 외국어고등학교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자꾸 동네마다 생기다 보니까 외국어고가 숫자가 많아지고 입시 관련해서 이렇게 하니까 각 동네에서는 왜 우리 동네에는 특목고, 외고가 없느냐 이래 가지고 본래 취지가 퇴색되면서 상당히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재 양성하는 것도 그런 데서 자꾸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정치계나 의회 이런 데서도 무리한 요구도 사실 솔직히 있어요, 제가 들어 보면. 그것을 임기 말일수록 정부에서는 더 원칙대로 지켜서, 큰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을 임기 말에 해결하려고 하는 일부 몇 개가 안건에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야 될 거면 내년에 새 정부 새 국회에서 다시 거론할 일이지 우물우물 늘 국회 말, 정권 말에 허둥허둥 법안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짐이 되는 것이 꽤 있어요, 제가 보면. 그것은 저도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부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홍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徐相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게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서 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좋습니다.

○유승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오전 중에 거론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마는 국감 증인 불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인 신재인 증인께서 금일 국감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재인 증인은 회의 시작 20분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빨리 당도할 것을 부탁해서 1시간 내에 도착한다고 했지만 오전 회의 종료 불과 10분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오늘 신재인 소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 사유라고 봅니다. 그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단 불출석한 것으로 이것은 국회의 권위에 상당히 도전 내지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과총 토론회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인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있습니다. 지금이 17대 국회이고 이런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사항을 증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명의로 고발되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위원님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국정감사 종료 후 최초로 개의되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재인 증인을 정식 고발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방금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회 차원에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부총리께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유승희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설비투자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는 양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은 OECD 평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성장 기여도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총 요소 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구 및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적은 국

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중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05년도 15.3%로 봤을 때 미국의 경우에 18.7%, 프랑스는 24.1%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기초연구를 기피하거나 특정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연구개발 투자비 중에 정부 부문의 재원부담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24%, 미국이 31%, 프랑스 38%, 영국이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의 기초연구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07, 금년입니다. 금년 R&D예산의 25.3%를 기초연구에 투자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다면 기초연구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기초연구야말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기초연구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용연구나 개발연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반해서 선진국들은 기초연구 분야를 계속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간의 기술혁신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선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개발투자도 사실 목표가 2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5%, 약 2조 600억 원을 저는 마크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25.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코 그렇게 뒤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기초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앞서 나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선진국 추세에 걸맞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유승희 위원** 다음으로 첨단 고기술 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인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첨단·고기술 업종으로 갈수록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집중도가 저기술 업종에서는 G7국가 평균치의 69%, 중기술 52.1%, 고기술 49.7%, 첨단기술 업종 47.6%로 첨단기술 업종으로 갈수록…… 이러한 첨단기술 업종은 의약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이런 부문, 그 다음 단계로 화학제품, 석유제품, 음식료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고기술 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첨단 고기술 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선은 저희들이 진단컨대 R&D투자가, 특히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는 R&D투자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하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기업들, 소위 5대 내지 10대 대기업 위주가 아닌 폭이 큰, 넓은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사항은 금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라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는 희망적 사항이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생산액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로 보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1%, 1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66%에 불과하고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IT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0.78%, 미국이나 이런 데는 10%, 일본은 무려 2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액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 결국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는 기술 및 첨단기술 업종에서조차도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의 연구개발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69.2%, 그러나 첨단기술 부문에서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절반이 넘는 53%로 미국의 17.4%, 일본의 14.3%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기술 부문에서도 자동차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약 16%로 고기술 업종 내에서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중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서는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나 항공기, 화학제품 등 첨단 신성장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바이오 이런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가치가 아주 높은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취약하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취약하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잠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이미 작년 말에 국가 R&D 중장기 토털 로드맵을 만들어서 33개의 핵심기술 분야, 57개의 비핵심, 후속으로 투자할 분야를 나누어서 토털 로드맵을 만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토털 로드맵에 의거해서 투자를 해 나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 로드맵이 제대로 우리 문제를 반영해서 로드맵대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미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더욱더 면밀하게 마련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승희 위원** 그리고 EU Framework Programme(FP)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매칭펀드 조건으로 개방돼 있어서 유럽의 미래 원천기술이나 유망 신산업기술의 국내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시다시피

EU Framework Programme이 세계 최대의 종합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기술이 강국이지만 소위 기술보장벽이 좀 낮고 또 기술 이전도 조금 용이하다,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EU와 공동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기초과학과 첨단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작년에 브뤼셀에 가 가지고 제가 한·EU 공동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부총리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6차 FP의 경우에는 총과제수 930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16개로 0.16%, 그러나 중국은 FP 컨소시엄 참여 시 자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80개 정도 과제에 참여하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회원국의 최고 실적을 중국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핑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은 6년 전에 이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해서 진행해 왔고, 저희들은 작년에 협정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작이 중국보다는 늦었기 때문에 과제 참여가 낮다는 말씀이신데 과기부에서 이렇게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일 뿐더러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Framework Programme에 대해서는 아직 덜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쉽게 조인(join)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사실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예산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에도 국제공동연구사업에 125억 정도 책정이 돼 있고, 국제화기반조성사업도 110억 정도 돼 있고, 지금 단계에서 예산

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이 확충은 돼야 되고 시스템이 더 보강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작년 선정 과제와 관련해서 국내 EU 관련 연구자와 교수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이렇게 집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에서 상당히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EU와의 관계에서 국가적 신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과 달리 현재 EU Framework Programme에 참여하는 수준은 제가 볼 때 행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지원이 돼야 되고,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접근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EU와의 관계 때문에 더욱 착실하게 진행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꼭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과학부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일률적인 연구개발 평가의 문제인데 혹시 부총리님, 암흑물질 연구해서 올해 7월 6일에 발행된 미국의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소개되고 8월 말에는 '피직스 리뷰 레터'에 논문이 게재된 서울대의 김선기 교수 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승희 위원** 암흑물질 연구가 선진국도 주목한 굉장히 유망한 기초연구 분야이고요. 김 교수팀은 해외에서도 "지하 700m에 실험실을 꾸려 팔목할 성과를 내고 있어 향후 '극저온 암흑물질 탐색' '제논 10'과 같은 대규모 연구를 보완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김 교수 연구가 올해 초 과학기술부의 창의연구단 사업 2단

계 평가에서 탈락해 가지고 한해 6억씩 받아온 연구비가 끊겼다고 하는데 탈락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가 암흑물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그런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있어서는 조금タイト하게 합니다. 그래서 9년간 지원하는데 3년마다 단기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단기평가하면서 하위 15%는 탈락시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런 암흑물질 과제는 일반적으로 연구성과를 나타내기가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얼마 전에는 우수과학연구센터(SRC) 선정에서도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탈락의 주요 원인이 논문 수라든지 피인용지수(IF)의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김 교수 연구의 특성상 1년에 한두 번밖에 논문을 낼 수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1년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평가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을 것인데 과연 이러한 평가기준이 적절한 기준인지, 왜냐하면 과학기술부가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평가기준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전에도 EU FP 얘기를 한 것이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너무 자의적인 행정의 관습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오히려 유망 연구를 더디게 하고 사장될 수도 있게 하는, 심지어는 사장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편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것을 위해서 평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KISTEP? 그런 전문적인 기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KISTEP이 평가기관이 아니고……

○유승희 위원 평가기준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기준을 정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평가기준을 설립하고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KISTEP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결국은 6억 프로젝트에서 탈락하고 나서 연구가 중단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들 지금, 특히 기초과학을 연구

하는 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4년 내내 이런 부분들이, 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한 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김 교수 같은 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아주 창의성 있는 것, 남들이 다 하기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창의성 있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부터 연구원들에게 30억의 연구비를 책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받지 않겠다, 결과를 안 봐도 좋으니까 아주 뛰어나고 그야말로 아주 독창적인 것은 프로세스만 하면 좋겠다 해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범위 안에서 김 교수님 것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꼭 점검을 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의 업적과 성과가 반드시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원 여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유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변재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하고 류근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저도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하면, 그날 대전에서 국정감사 끝난 후의 상황을 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위원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6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부 직원 또 국회 행정실의 직원 등을 포함해서 다 한 170명 정도가 식사를 했는데 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 또 그중에서 3명의 국회의원은 과학기술부 고위 간부,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 5명과 함께 8명이 인근 유흥주점에 가서

68만 원 상당의 음주를 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추측으로 인해 가지고 당사자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일단 오해를 받는 상태에 갔고 특히 당사자들 중에서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본다면 정치 생명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사법처리 문제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신하고 있었지만 정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점을 겪고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류근찬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그 자리에 동행하고 동석했던 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런 어려움에 처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소리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이 흥청망청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항을 대접받았다” 이런 오해를 받았고요. 또 류근찬 위원님이 오전에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려움에 처한 동료라면 동료이고 같이 동행했던 자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비겁하다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죄송합니다.

○변재일 위원 지난번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과학기술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무엇으로 제시했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끝나가는 말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습시다만 서면답변을 봤을 적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처음에 받았던 국감 자료와는 다르게 “전 계획에 대해서 매년, 반기별 연 2회 이렇게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시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시다.

○변재일 위원 나중에 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면…… 정부부처에서 그런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마스크를 타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마스크 탈 게 뭐가 해 갖고 새로운 계획서를 발표하고 또 한 번 관심을 끈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러면 정부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는 줄 알고 따랐던 중소기업체라든지 국민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지고, 그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로 인해서 중소기업체들이 그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이 상당히 많다, 물론 과학기술부 입장에서는 과학기술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소위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더 신뢰성 있을 때 발표해 주고 발표한 것은 끝까지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지방과학 육성의 경우에는 8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5개 지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3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은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기초연구의 진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당초에 약속했던 것은 2008년도까지 금액은 2.5배가 증가한 5717억 원을 추가해서 9475억 원을 하겠다, 연구인력을 1만 1080명까지 증원하겠다 이런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목표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된다면 국민이 좀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면 그 정량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일단은 발표해 놓고 나중에 성과가 이루어진 게 없을 적에 “그동안 상황변화가 있었다,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갖고 아쉬움이 좀 있었습시다.

그래서 기초연구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시다라는 지금 기초연구 분야에서

는 25.6%의 기초연구비 증액이 달성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신뢰성의 문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연구비 중에서 KISTEP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순수연구개발 사업비는 2005년도에 22.6%에서 2006년도에 18.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연구 활동분야는 2005년도에 13.2%에서 2006년도에 26.2%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연구와 복합연구, 복합연구는 순수연구 이외에 다른 실용화 연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지요. 그런 연구 중에서 “복합연구에서 기초연구비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기초연구비의 비중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STEPI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이, 특정기초연구사업 같은 경우에 2002년도는 신청하면 선정되는 비율이 32.4% 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신청해서 선정되는 비율이 13%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초연구를 하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구비가 줄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늘렸지만…… ‘옛날에는 신청하면 웬만하면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해서 참 따기 힘들다’ 이런 주변 환경이 된다면 기초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구 환경이 나빠졌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맞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STEPI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자가,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금액은 늘었지만 신청자가 늘어났다면 따기는 어려워지니까…… 소위 과학기술 기초연구를 하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기초연구비는 그에 맞춰 늘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계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는 잘했는데,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재정정책을 추진한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R&D 예산으로 투자했는데 왜 과학기술인들은 정부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느냐 이런 비난

이 이런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선정률이 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부총리께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이라는 것, 이공계 육성,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이런 것들인데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이런 것들이 이공계에 대한 어떤 저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정책 중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에는 하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와 가지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이 힘든 면도 있습니다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은 사실상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산업자원부가 주도해서 했던 산업입니다.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가 총괄적인 지휘를 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업무가 추진되어 갖고 오히려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2007년도까지 193만 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 1582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143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또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8월 22일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해서 2012년까지 102조 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1797억 불의 수출 증가를 하겠다, 147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국민한테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현재 나타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가장…… 참여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인수위원회에서 정권을 인수하자마자 첫 번째로 추진했던 것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선정이 잘못된 건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건지 해 가지고 그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파격적으로 개인별 기초연구비를 한 32% 올려서 금년에 한 2200억 되는데 내년에 한 3800억으로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기술인들을 사랑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좀더 대우받는 사회가 되려면 그분들이 우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산업정책에까지 신경쓰시는데 그것보다 과학기술부의 기본 업무는 과학기술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변재일 위원** 대덕R&D특구는 국감 과정에서 말씀드렸습지만, 대덕R&D특구법이 제정되면서 네 가지의 정책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겠다, 타지역으로 성과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연구성과의 사업화는 특구법 제정 이후에 특구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서 특구법 제정 이전이 27.9%의 사업화율을 가졌는데—특허의 사업화율입니다—특구법 제정 이후에 28.9%로 1%가 증가했습니다, 사업화율이. 그런데 전자통신연구원의 통계를 빼면 특구법 제정 이후에 특허의 사업화율이 7.7%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벤처생태계조성사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첨단기술기업 문제인데 첨단기술기업을 2010년까지 1485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지만 2007년 10월 현재 22개 기업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1485개를 2010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글로벌 환경구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던 동북아 R&D 허브 또 외자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책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기 시작하면서 대덕R&D특구에 5만 평의 외국인 전용단지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단 설립 자체가 백지화되고 일반 공단으로 해 가지고 분양하고 말았거든요.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할 수 있는 외자기업 유치를 실패해서 그렇다, 외자기업의 신청이 50%

가 안 돼서 그렇다” 그것이 대덕R&D특구 이사장의 답변인데 대덕테크노밸리에 5만 평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구성하면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되었던 과학기술부가 되었던 또 대덕R&D특구본부가 되었던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

○**변재일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은 “이번에는 외자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가지고 실패했지만 1단계 개발사업인지 2단계, 거기에서는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외자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외국인 전용공단에 인접한 다른 오송·오창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전용공단이 다 외국인 기업에다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대덕R&D특구 같은 데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외국인 기업 유치를 하나도 못했는지…… 아니, 하나도 못 한 것은 아니겠지요. 상당히 참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덕R&D특구라는 것은 이제 2년 밖에 안 되었다, 3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30년 축적된 R&D 역량을 사업화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잘못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에 대해서 진짜 실현할 수 없는 비전을 제시하는 바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대덕R&D특구만 되면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시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어 가지만 좀……

지난번 23일날 산업기술연구회 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부총리께 한번 다시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기관평가결과 활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기관장 연봉 산정이나 정부출연금 예산 차등 반영 이런 것으로 지금 결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장도 그러려니와 연구원들 개개인에게까지는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 예컨대 2007년 평가결과 차등 반영 실적을 보면 삭감 폭이 예산 1%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출연연구소 예산 중에서 수탁사업 비중이 대개 3분의 2나 되는 상황에서, 기본사업비 중 3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 예산조처 가지고 평가의 의미가 있겠는가, 기관장의 경우에는 연봉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습니까라는……

그래서 출연연 전체 구성원들, 일반적인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간 기분 문제이지 평가 잘 받으나 못 받으나 별 차이 있겠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이면 활용 정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단계적으로 가령 순수연구하는 부분, 예를 들면 천문연이라든가 또 기타 응용과 연결될 수 있는 부문과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인정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위원, 홍창선 위원과 사회교대)

**○유시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평가를 어렵게…… 또 그 평가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 놓고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관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행사부랑 대강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포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별성 두는 것은 아니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번부터 전에 했다가 중지됐던 포상제도를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유시민 위원** 2004년도까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를 국조실에서 하고 있었고 그때는 그런 포상제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뒤에 과기부로 오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없어졌습니

다. 이번에 다시 부활시킵니다.

**○유시민 위원** 이것은 연구자들한테는 좀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다 좋아서 좋은 뜻으로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또한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강하게 결합될수록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포상을 살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어렵게 한 평가의 결과가 성적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고 또 성과를 많이 낸 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다음에 부총리님 연세가 상당히 하신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혹시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웃으면서)

DNA가 괜찮은 모양이지요.

**○유시민 위원** 아니, 특별한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든가 특별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오히려 저는 소식을 합니다.

**○유시민 위원**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우스운 질문을 드린 것은, R&D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 R&D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성과가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영역에서는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 R&D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시민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대전에서 기초기술연구회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연구원 관련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못 들었습니다.

**○유시민 위원** 이제마 프로젝트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위원** 혹시 우리 부총리께서도 체질의

학에 따른 섭생이랄까 이런 것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학하고 우리 한의학, 소위 이제마 프로그램하고 접목할 수 없을까 하고 한번 제안한 바가 있어서 우리 한의학연구원하고 그런 쪽으로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런데 이제마 프로젝트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본부, 제가 이름을 그전에 건강투자정책본부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까?

○유시민 위원 예, 한의학연구원은 소관이 지금 과기부로 와 있지만 그 연구 내용이 결국은 한의학이니까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연관이 있을 텐데, 특히 예방의학·건강증진·질병예방 이런 것이 사상의학의 주요한 특징인데 정작 국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의 해당 본부하고는 별도로 교류 없이…… 그날 원장님 말씀으로는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보니까 금년도에 한 20~30억 정도 예산을 넣고 있고 3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그 뒤에 더 늘려서 한 120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로 만들겠다 이런 보고를 그날 한의학연구원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정부 내에서도 예산배분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경쟁이 심하고, 또 실링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 부처 안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도 그 안에서 예산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두고 여러 사업과트 사이에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시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좋은 말씀 이것저것 하시는데 제가 프로젝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조인(join)해 가지고 제목은 굉장히 그럴 듯한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이 프로젝트가 폭넓은 공중의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과 관련해서는 임상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임상효과

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입증해 보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가 한의학연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프로젝트 내용에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연구자들에게 다 맡겨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왜 그런 내용이 없느냐 여쭙 봤더니 연구원을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적어도 1200억을 앞으로 여러 해 동안 1년에 100억 이상씩 넣을 정도로 하려면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거 제시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이게 대개 천연물을 가지고 하는 복합제이기 때문에 약리작용을 규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도의학 쪽에서는 잘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이고 또 사상의학뿐만 아니라 팔상이나 거기서 가지 쳐 나간 분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국립보건원이나 이런 데하고 해 가지고 샘플로 특정 학교나 기업 혹은 필요하다면 과기부 또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부처를 아주 지정해서 거기에 맞게 체질진단도 하고 식단도 거기에 맞게 짜고 거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같은 것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대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2~3년 해 보면 임상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느냐……

검증도 국립보건원 같은 데서 하고 그래서 약리작용은 규명이 안 되어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광범위하게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병도 덜 걸리고 병원에도 덜 가서 가지고 건보 재정도 절약되고 그렇게 되면 R&D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전문가들이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1200억짜리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과연 정부 안에서 예산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쟁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 살아남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 질문을 했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어떻습니까? 제 말씀 들어 보고 과기부·복지부 두 군데를 찍어 가지고 구내식당하고 다 조인해서 그 처방대로 한번 해 보면 어



면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실제 인체를 놓고 직접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아니, 이것은 식사만 조절하는 겁니다, 섭생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유시민 위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학교나 정부 구내식당에서 똑같은 밥을 다 먹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학설이 일반적인 정설인데 골고루 먹으면 건강을 망친다는 게 사상이 이제마 선생의 주장이거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체질에 맞는 것을 먹어라……

○유시민 위원 그렇지요. 체질에 맞게 편식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이제마 선생의 이론이 일반적인 한의학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학이나 제도의학에서 권고하는 것과 전혀 다른 특별한 내용입니다, 핵심이.

물론 병에 걸리고 나면 약도 체질에 맞게 쓰고 침도 체질이 맞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만 기본은 역시 식생활을 체질에 맞게 편식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마 선생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은 체질 감별해 가지고 체질별로 맞게 식단 짜 놓고 자기가 갖다 퍼먹게 하면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좀 지키게 하고.

전혀 임상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또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지도층 또는 건강증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까?

○유시민 위원 저도 복지부 있을 때 못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그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한번 한의학연구원장님하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한의학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분위기 좋게 할 겸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좋습니다.

○유시민 위원 부총리님,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병원에 제일 많이 가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유시민 위원 과기부 산하에 생명공학, 의학 이런 쪽도 굉장히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시민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병원에 많이 갑니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고요,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까?

○유시민 위원 연간 국민 1인당 평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건수가 약 11회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정도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의 사회적 구성 차이를 보정하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이 얘기는 좋은 게 아니고…… 옛날에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할 때는 이런 것이 정부정책의 성과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너무 많고 국민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국민이 병원에 너무 많이 간다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낮추는 게 정부의 성과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의 초점이 병 걸릴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일단 병 걸리고 나면 그다음에 치료해 주는 데 보건재정의 97%를 쓰고 있고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병원에 안 가게 만드는 데는 3%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 같은 곳이…… 원래 한의학이 예방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랄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민을 병원 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부러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병원에 갈 필요성을 덜 느끼게 만드는 여러 프로젝트들, 이런 아주 실용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을 유관 연구원 같은 곳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이 훨씬 좋아하실 것 같아요.

프로젝트 제목을 봐도 뭘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프로젝트보다는 여기서 뭐가 나오면 내가 그

것을 보고 따라하면 건강해지겠구나라고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을 전문가들이 밑실에서 자기들끼리만 연구를 진행하고…… SCI 논문 많이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을 아무리 많이 내도 국민건강은 계속 나빠지는데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좀 뒤집어서 한번 보셔 가지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제가 좀 장황했는데 밥 먹고 나니까 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담 삼아 몇 말씀 드렸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유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한나라당 서상기 위원입니다.

지난 첫 번째 국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과기부 쪽에서 온 답변도 제가 의도한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참여 정부 4년 동안에, 이제 곧 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과학 분야의 경쟁력이 14위에서 7위로 급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거기에서는 IMD 보고서를 인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번역본이 있었고 여기 원본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과학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의 번역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과학 분야의, 기술 분야의 성적순처럼 하신 것은 아무리 참여 정부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업적 선전보다 국민 혹은 과학자들에게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IMD 보고서 그 자체는 컴페티티브니스 이어북(Competitiveness Yearbook)입니다. 그것은 경쟁력이지요.

그러나 인용하신 부분은 영어로는 분명히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읽어 보면 인프라이

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과학 분야의 경쟁력이 14위에서 7위로 점프한 것이 아니고 인프라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은 치적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14위에서 7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영국을 따라잡았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더더구나 그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기술 섹션을 보면 이것도 인프라입니다. 기술력이 아닙니다. 기술 경쟁력이 아닙니다. 테크놀로지컬 인프라스트럭처(Technological Infrastructure)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또 기술이 아니고 전부가 IT, 인터넷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인용하신 것은 분명히 업무상의 착오거나 아니면 IMD 컴페티티브니스 이어북(Competitiveness Yearbook)을 인용했다는 핑계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희들이 지금 IMD만 인용한 것이 아니고 가령 OECD, 랜드연구소 보고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IMD에서 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徐相箕 委員 국가경쟁력이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국가경쟁력.

○徐相箕 委員 그것도 지금 제가 아이템 바이 아이템(item by item)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예를 들면 IMD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과학기술부에서 할 입장이 아니지요.

○徐相箕 委員 그렇다면 번역을 바로 하셔야지요. 인용한 것은 IM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7, 그러나 항목은 사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Science Infrastructure)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하셨다고 하지만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게 14위에서 7위로 점프한 것은 IMD 인프라스트럭처 그 섹션에만 나와 있는 등위이지 다른 데서는 다 다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렇다면 과학 경쟁력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가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업적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좋게 만든 업적은 그것대로 인정받으시면 되는데 이것을 과학 경쟁력이라고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오도하신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인용하시려면 이제는…… 이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노벨상을 기준으로 한 순위, 논문을 기준으로 한 순위 그런 순위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뽑아서 그것을 합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쟁력의 순위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게 국민을 오도 내지는 혼란시키는 인용을 하셔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하신 말씀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徐相箕 委員 이해하면 고치실 거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고친다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과기부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발표된 데이터를 저희들은 그냥 원용했을 뿐입니다.

○徐相箕 委員 원용이 아니지요. 오용이지요. 이런 것을 원용이라고 안 그러합니다. 오용이라고 그러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는 원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발표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徐相箕 委員 그것은 그것대로 또 경제 측면에서…… 저는 과학기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니, 그 안에 과학기술 부문이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것은 기여를 했겠지요. 특히 인프라 쪽의 기여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여도가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 동안에 14위에서 7위로 점프했다는 것과고는 전혀 앞뒤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기여도가 얼마인지 그것도 우리가 따져 볼 일이지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난번 지적하셔서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를, 오늘 나온 것까지 합해서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

니다.

○徐相箕 委員 논의가 아니고 우선 번역부터, 그러니까 논의는 나중에 하고 번역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infrastructure’하고 ‘competitiveness’라는 단어하고의 번역을 영어사전 보고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번역을 안 하고 오용 혹은 남용, 악용을 해서 이런 꼴이 생긴 겁니다. 원용이 아닙니다, 인용도 아니고. 같은 ‘용’자라도 돌림자가 다 다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알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지, 어떻게 과학기술 부문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총리가 계시는 과기부에서 ‘infrastructure’하고 ‘competitiveness’의 번역을 이렇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희들이 번역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언론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徐相箕 委員 과기부의 통계를 보고 언론에 실어야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과기부가 써서 됩니까? 그게 말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과기부의 통계가 아니지요. 그것은 IMD 통계이지요.

○徐相箕 委員 IMD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徐相箕 委員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 그 정도 영어는 과학기술계에서 다 아니까 그러면 ‘과학 경쟁력’ 하지 마시고 아예 ‘Scientific Infrastructure’라고 영어로 쓰세요. 그 정도 영어는 다 압니다. 그렇게 쓰시면 아무 오해가 없을 겁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하고 스타마크 해 가지고, 풋노트를 해 가지고 ‘이것은 infrastructure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 없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아예 영어로 쓰도록 하십시오, 정 그러시면. 우리 국민도 이제 영어교육이 어릴 때부터 잘돼 가지고 ‘infrastructure’하고 ‘competitiveness’의 차이점은, 영어로 말하면 디퍼런스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아무리 정권 말기에 업적 선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쪽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뼈 빠지게 기술 개발하고 또 이게 한 번 유출이 됐다 하면 큰 것은 조 단위로 손실이 예측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과기부나 국정원이나 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정말 기술 개발하는 이상의 노력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뭐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순경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 말고 기술 유출의 합법적인 통로가 바로 M&A를 통한 겁니다. 우리는 미처 이 기술의 가치를 모르는데 이 기술의 가치를 알고 회사의 현재 영업실적이나 주가가치가 별로 안 나가더라도 기술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통째로, 그러니까 회사를 사서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은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만 큰 대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A를 허용할 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우리가 대형사업을 할 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듯이, 한번 평가를 받아 봐야 된다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徐相箕 委員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부처간의 이견이라 그러면 대충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이견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부가 건교부의 대형 프로젝트에 제동을 건다든지 또 수출경쟁력을 주장하는 산자부에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기부에서는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될 텐데 어떻게 M&A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한 검토를, 과기부라는 부처까지 명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 검토를 정부에서—정부를 거친다 그러면 과기부 아닙니까—거칠 수 있다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기술 보호는 산자부가 주관하지요, 지금.

○徐相箕 委員 그러니까요. 하여튼 과기부도 기

술 보호 쪽에 동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부처의 성격상.

그런데 과기부에서 이 법에 대한 의견이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의 유출이 있더라도 M&A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서를 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는 예를 들면 재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지만 과기부에서만은 결사적으로 ‘기술 유출의 우려성이 있을 때는 정부의 기술 유출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M&A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IMF 때 외자 유치에 급급해서 다 풀어 놓은 것, 아무 제약 없이 다 풀어 놓은 것 이것을 꼭 필요한 부분…… 미국에도 엑스-플로리오법이 있고 일본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조금 조금의 그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도의 제약조건 이런 것은 우리가 기술 측면에서 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과기부는 너무 쉽게,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관철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과기부의 입장은 분명히 기술 문제가 걸리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는 외자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처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당 부처에서……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큰 대규모 행사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토 개발에 상당히 유익하니까 환경영향 우리가 묵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이것이지요.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검토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이 법이 부처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의 의견 제시가 그런 쪽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구체

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과기부의 혹은 정부의, 기술 유출에 대한 국가의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서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주제보다는 전체적으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 한 해의 종합감사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4년간의 종합감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기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통계의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수준이 국회의원들하고 정부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더 심각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문제로 인식 하나 결과 도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올해 데이터나 통계 오류를 지적했던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특허가 말 그대로 그냥 종이조각 특허, 그러니까 번호만 붙어 있는 특허로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등록 건수하고 실제 사용된 건수하고의 기본현황 파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기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하고 그리고 출연연을 통해서 받은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과기부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에서의 자료 이 삼자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예결위에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고 과기정위에 제출하는 자료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출연연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서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난번 감사

때도 강성종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한번 트레이싱(tracing)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점검이 제대로 되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이미 김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를 서로 같은 자료로 들고 있어야지 인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연연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말은 결국은 산하기관이 본부에다가 제출할 때도 자료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짜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짜 차이에서 오는 거라면 이후에 오는 자료에서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용한 특허에 대한 숫자는 인식의 차이에서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된 특허 수부터가 날짜 상관없이 오히려 앞에 보고했던 게 더 많고 뒤에 보고하는 게 작은 식으로 가는 것이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마크하기 위해서 코드를 비롯해서 각종 시스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연구원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소위 과기부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그런 것 아닙니까? 수령들이 쓰는 자가 다르고, 옛날로 얘기하면 상인들이 쓰는 자가 다르고 세금 내야 되는 국민들이 쓰는 자가 다르고, 이게 무슨…… 진짜 옛날 케케묵은 시대에서 서로 다른 자를 들고 이게 몇 되다 몇 되다, 이게 몇 냥이다 몇 냥이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김에 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했습니다, 그 질의를 끝내고 나서. 그랬더니 출연연 중에서도 통계관리시스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기술이전관리시스템, 기타 지원관리시스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영어는 다 다릅니다, 시스템의 이름

이. 그런데 그것도 어떤 출연연은 사용하고 안 하고가 같은 연구회 산하라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로 승격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좀 관리하자고 만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종합 관리하기 위해서요.

○김희정 위원 예. 그러니까 본부하고 산하기관 간에도 서로 다르고요, 출연연 간에도 사용하는 시스템이 서로 다르고 이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하실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하신 것을 주시면 그것을……

○김희정 위원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면서 전혀 모르는 척 얘기를 하기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필요하시면 부총리님께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방금 첫 번째 사례는 데이터 통계의 오류 측면이고요.

똑같은 계산치를 놓고도 부풀리기의 사례를 제가 또 하나 들겠습니다.

기상청을 예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기상청에서 특보 정확도를 발표할 때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도, 소위 정확도 계산을 할 때 특보현상이 있었으나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못맞춘 것으로 카운팅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계속 기상현상이 있어도 안 맞추고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오류 0%인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계성공지수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사례로 지적되는 건수들만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닌데, 아까 특허는 데이터 간 차이 측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이제 부풀리기 사례로 기상청 특보 정확도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계성공지수로 바뀌어서 하면 70%였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발표로 바꾸면 66.2%이고, 임계성공지수로 바꾸면 25.5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소위 부풀리거나 자의적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장, 그것은 지금……

○기상청장 이만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문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드러난 게 어떤 건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것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부서 자체에서 한 것하고 기획예산처에서의 점검하고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부처가 혹시 어디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과학기술부입니까?

○김희정 위원 예, 과기부입니다.

제가 그것 아니면 왜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저도 놀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예결위를 하면서, 올해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전 부처 것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기부가 1등을 해 버려서 그런데……

부처 평가에서도 과기부가 자기네 것을 잘했다고, 재정사업을 잘했다고 99.3점을 줬더라고요, 06년도 것을. 그런데 실제 기획처에서 재평가를 했더니 57.5점이 나왔습니다. 즉 41.8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옆을 돌아보며)

혹시 알아요? 재정기획관……

○김희정 위원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신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저는 처음 듣는……

○과학기술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 김진경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좀 드리세요.

○김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을 하십시오,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말씀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과학기술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 김진경  
과기부가 평가한 것하고 기획예산처가 평가한 것  
하고 수치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우리 입  
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그대로 평가한 수치를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좀 잣대  
가 달라서 우리……

○김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앓으십시오.  
부총리님, 답변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기획처가 사용하는 자하고 과기부가 사  
용하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 얘  
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  
부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  
니까 “야, 우리는 채점했더니 99.3이 나오는데 기  
획처가 채점하니까 57.5가 나온다”…… 그런 것  
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오  
는 사업이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문제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는 점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히 편차가 가장 많이 나게  
된 이유가 어디인지를 봤더니 올해는 원자력안전  
기반구축사업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체계 구  
축에서 엄청나게 뺏기해서 채점을 해서 보냈어  
요, 과기부에서. 96.4점과 100점으로 보냈는데 기  
획처에는 51.7점과 66.4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까 제가 느낀 문제 인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 감사에서 원자력연구소에서  
우라늄 물질 분실한 것이 사건의 재구성이 안 되  
어 있다, 그러니까 팩트 확인 자체가 안 되어 있  
다는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랬지요.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희정 위원 그래서 사후에 팩트에 대한 보고  
는 받았습시다만 그것도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  
이지 어떤 정황도 그것을 받쳐주지 못해요. 추측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으니  
까 그것은 그렇게 치고요.

제가 산하기관 감사를 할 때는 사후대처가 어  
떻게 되고 있는지에 포인트를 바꿔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왔어요. 내가 사후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폐기물 처리  
가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  
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일반 폐기물 집하장에 이런 식으로 막  
쌓여 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바깥에 이렇게 쓰  
레기를 버리고 있더라, 그래서 지정 폐기물과 일  
반 폐기물 사이에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있다라  
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담당  
하는 사람은 액체냐 고체냐만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즉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위 원자력  
과 관련된 물질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폐기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답변을 보내왔느냐면 이 밑의 사진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총리님, 한번 저기 화면을 보시  
지요. 안 나오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 다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초등  
학교 학생들 운동장에 청소 안 되어 있는 것 때  
문에 이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닌데 그것을 “전에  
이랬는데 사실은 청소하면 이 모습이 됩니다”라  
고 이런 식으로 보내오는 것 자체가 제가 뭐를  
문제로 지적하는지를 인식 못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폐기물 보관소와 지정 폐기물 보관소  
의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가 잘된 건  
사실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날 청소가 안 되어 있다고 문제 지적을 한 게 아  
니라 이런 식으로 혼재가 되어서 마구잡이로 버  
려지니까 이런 쓰레기 속에 소위 우라늄 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고 모  
르지 않느냐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청소 다 끝  
났다고 청소 끝난 사진을 보내왔어요. 대표적인  
진짜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의 점수를 100점이라고 냈는  
데 꺾어서 66.4점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이런 데  
서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고 한 번  
더 터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업체에서조차 그 안에 특  
별한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던 원자력연

구소 관계자들이랑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게 나와요. 보고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 담당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후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지금 원자력원장 나와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직무대행 정연호 예.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조금 보충 말씀드릴 게 있으면……

○김희정 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다음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할 말 있으시면 저를 따로 찾아 오십시오,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역시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읍천단층 때문에 자문위원들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고를 했는데 한수원에서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결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같은 국가 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에 관련해서는 제일 전문가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부총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보냈습니다.

○김희정 위원 결과가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건물이 있는데 실제 관측된 읍천단층 면은 이 포인트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 관측된 것과 다른 부분을 관측해 가지고 문제 없다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게 지질자원연구원의 주장이고 이게 한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질 전문가들이랑 의견이 다른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향력을 검토하면 최대 변위하고 파열길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지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위험하다는 결론이…… 이것은 제가 쓴 보고서가 아닙니다. 부총리님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보낸 보고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혹시 보충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태섭 저희들이 보낸 자료에는 저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희정 위원 지질원에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 10월 31일날 과기부 원자력국이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 받아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태섭 글썽요, 저 보고서에 저 내용은 없는데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뭡니까?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 보고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그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보내드린 보고서에는 그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림은 제가 그린 거지요.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를 보내드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니, 그 데이터 플랏(plot)는 김 위원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요, 지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최대변위 규모를 얼마로 보내셨습니까, 저한테?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지금 최대변위를 보내드린 것은, 지금 검토의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읍천단층의 최대변위가 0.5~3m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최대변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지진 규모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그러니까 최대변위는, 지진 규모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반경 32km 이내에……

○김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길  
게 하시지 말고요. 수치로 딱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얘기를 했으니…… 최대  
변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지진 규모가 얼마 나오니  
까?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6.0입니다.

○김희정 위원 6.5~7.4입니다.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  
면……

○김희정 위원 자, 그러면 파열길이 기준으로는  
얼마로 보냈습니까?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파열길이 기준으로는 4.7~7.1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낸 자료랑  
뭐가 다른지? 지금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  
는데……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대변위라는 것은, 그 사  
이에 사이 값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중치를 각각  
해 주어야 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엉터리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그러니까 결론에 나온 것을 자꾸 엉터리라고 말  
씀하시는데……

○김희정 위원 부총리님……

○위원장대리 홍창선 보고서 확인을 나중에 했  
으면 좋겠네요.

○김희정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숫자로 받은 것을. 그  
런데 방금 보고를 받으셨듯이 파열길이가 4.7~  
7.1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봤을 때에는 7.1이라  
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 최대변위를  
두고 지진이 있을 때에는 방금 저한테 불러주신  
수치하고 저한테 보고서로 와 있는 수치는 약간  
다릅니다. 6.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보고서  
에는 6.5~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수원에서 제시한 수치하고는 벗어나고 있습니  
다.

○과학기술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심의관 문병룡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위하고 길이하고를 같이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계산을 해야만 거기에서  
지진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가  
지고, 최대 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가중치가 완전히 1이고 한쪽은 0이 아닙니다. 가  
중치를 나누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문 심의관님, 지금 이 보  
고서 진위 여부는 한 5분을 더 드린다고 해서 될  
성질같이 들리지 않으니 추가질의 시간 전에 조  
금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있습니  
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또 하나의 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똑같  
은 자료를 놓고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  
냐에 따라서 소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다가 작성자와 책임자가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팩트로  
나온 수치에 대해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  
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상황파악을 한번 하시고  
제가 추가질의 요청을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저한테  
책임자하고 상세하게 보내서 보고를 좀 해 주  
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  
합감사 부분 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제가 2-1  
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2부터는 추  
가질의 신청하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것은 그 사이에 자료 준비하셔서 추가  
질의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통합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조용하고 어떤 주로 하

는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또 심층적으로 하는 상임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국정감사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에서의 향응 과문도 저희 상임위가 상당히 중심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오늘 기관의 증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또 이해되지 않는 사유로 불참하시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저희들로서는 좀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종합질의를 마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의 성과나 또 향후 방향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종합질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총리님, 지금 한국과학영재학교하고 기준에 있는 과학고하고의 병립 또 충돌 이런 문제들이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안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과학영재학교의 국립화 그리고 추가 지정, 부산과학고가 2003년부터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부의 집중적인 콘텐츠 제공, 예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과학영재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동시에 이원화된 감독·지원체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동시라기보다도 관계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원만 하고 감독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겠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커리큘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이종걸 위원** 그렇지요. 지원하게 되면 지원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정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부의 지원은 항상 규제와도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이종걸 위원** 그래서 보면 이원화된 체제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현안문제로 해서……

○**이종걸 위원** 과학영재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부산에

있는 과학영재학교는 지금 문제가,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이종걸 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1년에 52억……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장학금 같은 것 한 50여 억 되지요?

○**이종걸 위원** 매칭으로 부산시에서도 부담하고 있겠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리 KAIST 쪽에서 70억쯤 될 것 같습니다.

○**이종걸 위원** 과학기술부에서 KAIST를 통해서 70억 원이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이종걸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모집이, 물론 부산지역에 있습니다마는 학생 감소가 있고 재정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받지는 못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학생이 그렇게 감소된다고는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종걸 위원** 부산지역의 학생이 감소되다 보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영재학교가 딱 하나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가고……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일원화하는 체제로 바꾸어 보자는 입장에 대해서 연구나 보고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본 스탠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영재학교를 키우는 데 우선 영재학교의 전체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의 실험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일반대학과 같이 공개경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KAIST하고 포항공대, 부분적으로는 서울대학 이렇게 아주 국한해서 특례 입학의 형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입시학

원화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 말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우선 일원화된 감독·지원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고요, 그게 제기되고 있으니까.

과학영재학교는 그런데,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과학고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불만이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예산상의 차별을 받고 있고 교육사업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못 받고 있다는 게 과학고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과학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영재학교의 추가 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영재학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만든다는 것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영재학교의 확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기존의 과학고와 과학영재고의 중첩적인 제도적 존속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의 과학고를 폐지하고 과학영재학교를 다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지금 부산 영재학교만큼 예산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뿐만 아니라 창의적 실험교육 등등이 실제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이공계 우수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과학영재고등학교도 있고 과학고도 있지만 지금 이공계로 오는 우수인력들은 대폭 없어지면서 어디론가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진다는 지적입니다.

과학올림피아드, 이 경시대회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시대회가 기초적인 수학, 과학의 토대적인 배양 이런 것의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까마는 또 이게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올림피아드는 고등학교 입시 수단으로 그리고 고등학생 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진학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고등학교 과학올림피아드의 대학 진학 수단은 주로 의과대학 진학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국제올림피아드 관련된 전향적인 병역특례 방안이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과학……

○이종걸 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이종걸 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상자들에게는 병역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또는…… 그것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의학 전공자 중 임상의학자 이것은 편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초의학자는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가령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되 임상 쪽은 제외시킨다 이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의과대학 졸업한 이후에 병역 시기에 그것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혜택을 줄 때……

○이종걸 위원 그것을 잘 보시고요.

보면 2006년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들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별해서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입시, 사교육 과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시대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래서 과학올림피아드도 방향을 바꿔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험이라든지 토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체험 위주 항목으로서 선발하는, 경시를 시키는 것을 지금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 차제에 이공계 교육과 이공계를 통과한 많은 과학자들의 대우 이것들이 반드시 연계되어서 병역제도 그리고 상당한 생활보장제도까지 아주 획기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과학영재고등학교, 과학고, 이공계 지원 그리고 이공계 배출된 사람들에 대한 대우까지 연결해서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그것을 이 위원님께는 못 드린 것 같은데 하나 그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주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관리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대개 모든 제도를 다 집어넣어서 한 그림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획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연계된, 어린이 신동프로그램부터 초·중등학교 영재학원이라고 해서 25개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과학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는 대학·대학원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서울공대도 우열반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종걸 위원 지금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리고 최근에, 공과대학 교수

연배쯤 되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연령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모두 기존의 공대교수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조건에 미달했다는 사실도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서울대에서 이번에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가장 우수한 인력의 층은 점점 없어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된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있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도의 예산상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면 저희들도 함께 돕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이종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저번에 과학중심사회, 과학문화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기관들에게 물어 봤는데 과학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주목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하고 나머지 기타도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 홍창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희정 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각 위원들도 보면 자기 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서까지도 다 보고 와서 그 속에서 대답을 얻곤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오늘 종합감사를 하면서 스태프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최종 확인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제목조차 파악을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누가 정리를 하셔서 항목별로라도 가지고 계셔야지 서로 동문서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증인명단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계속 질의를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의 저한테 이 보고서를 보내준 분이 지진연구센터장 신진수 센터장님과 지현철 책임연구원님, 강태섭 선임연구원님을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하고 개인면담을 통해서라도, 아까 부총리님 뒤에서 답변하신 분이 누구죠? 위증여부를 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원자력안전심의관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도 아니면서 왜 헛소리하는 데 나오느냐 말이에요. 저는 답변하신 분이 지질자원연구원장님인 줄……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담당부서입니다, 지질에 대해서. 담당 국장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끼어들 때는 통성명, 소속을 밝히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제출한 보고서도 아니면서 어디 함부로 끼어들어서 답변을 합니까?

저한테 이 문건 공식적으로 제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여기 다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 요구하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원장님은 뒤에 계십니다.

○김희정 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지금은 문건의 사실 여부를 가지고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니깐 출석해 주시고, 함부로 끼어드신 방금 저분은 저한테 어떻게 해서 본인이 보고서도 읽어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끼어들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경과를 바로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지질자원 이태섭 원장님, 혹시 담당자 분이 이 근처에 있으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김희정 위원 연구원장님도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혹시 대전에 계시면 물리적으로 오늘 중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태섭 두 사람은 대전에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체육대회라서 한 사람만 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센터장이 와 있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태섭 예.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대기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창선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부총리님, TLO라고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박형준 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LO 보유기관이 24곳 중에서 15곳이고 9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또 성과 전담인력 자격증 소지자도 198명 중 46명으로 23%에 불과하고 3년 이상 근속자도 198명 중 80명으로 4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과관리조직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성과관리 조직이 필요 없는 것을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이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력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현재까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미설치한 데는 왜 미설치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 조직이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야말로 형식적으로 설정을 해 놔서 새로운…… 해당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모두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이런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와 없는 데를 구별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점검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참여정부가 5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실제로 각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여전히 과학기술 경시풍토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가 275명인데 이 중에 한 22%가 의과대로 진학을 했고 또 해외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전공을 갖고 유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를 기피하는 현상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현상이.

실제로 2007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수시 모집 1차 추가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에 대한 미등록자 비율이 약대 22%, 공대 9.87%, 자연대 10.83%를 기록했고요. 공대 화학생물공학부의 경우 정원 88명 중에 14명인 15.9%가 미등록을 했습니다. 재료공학부·수리과학부 다 비슷한 실정인데, 또 이공계열 대졸 취업자의 41.1%가 지금 비전공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공계가 우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5년 동안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을 텐데 그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박형준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수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제가 다른 국감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과학관을 지역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지어서 실제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과학에 대한 체험, 과학과 가까이

하기 이것을 대단히 활성화해 놓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과학자들 또는 기술자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잘 이해하고 공유할 때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도 높아지고 프레스티지(prestige)도 생기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것인지 과학기술은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자꾸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이나 일반 학생들과 과학기술 분야의 거리가 점점 넓어진다 이거지요.

그러면 과학기술정책 자체가 우수 인재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과학기술문화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그것은 특히 교육부하고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됨으로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것은 뭔가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그리로 가면 고생길이 흰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문화 속에서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쪽으로 진학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없어지니까 사실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영재를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시스템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고양시키는 정책을 써야 될 텐데 그 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 각각 놓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경시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작년부터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를 아주 중요 표제로 내걸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학관을 광주과학관·대구과학관·과천과학관 짓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62개의 지방과학관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TV도 좀 어렵게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일환이고요.

‘금요일에 과학터치’라고 해 가지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연구자들이 서울역·부산역·광주역·대전역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직접 나가서 움직이고 있는 것 등등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과학기술인들만의 행사다 또는 과학기술은 어렵

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박형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과학관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산 과학영재학교 예산을 십몇억씩 삭감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빼서 이리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곤란하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것은 아니지요.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과학관을 짓는다든지……

또 과학관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관에서 지은 과학관이라든지 체험관이 사실상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과학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결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과학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것을 떼어 가지고 그리 붙여서 다른 데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할 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 측면에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산 측면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 대학의 공대교수 채용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대가 여러 가지 R&D나 산학협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신입 교수를 계속 채용해야 하는데 최근 5학기 간에 당초 225명의 신입 교수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47.8%인 117명 채용에 그쳤습니다. 교수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공대교수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 인력이 돌아오는 것을 보더라도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귀국률이 95년에 69.5%에서 2002년에 48.7%로 22% 급감하는 등 평균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우리 과학기술부문의 혁신이라든지 그것을 토대로 한 잠재성장

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과학기술부 자체의 왜곡된 성과주의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김태환 위원실 자료를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 신규 창출된 일자리가 9959개라고 했지만 실제 분석을 해 보니까 106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신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2006년에 계속 일했으면 그것을 신규 일자리로 쳐서 이 사람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일하면 5명이 고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 계산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계산법이지요. 그런 계산법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창출하면 전부 비정규직으로 상정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과학기술부 자체가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모든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투명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사용후 핵연료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분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기술적으로……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발표된 정책으로 보면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와 발열량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유카산 처분장 20개가 21세기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1개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론적으로는 지금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GNEP의 16개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GNEP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성하고 국무성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미국 DOE 장관하고는 저희들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파이로 프로세싱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

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질문을 못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드리고요.

한국전기연구원장님 나와 계세요?

○한국전기연구원장 박동욱 예, 나와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낙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한국전기연구원장 박동욱 예.

○박형준 위원 지금 인명피해 이것도 문제지만 시설피해도 상당히 낙뢰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뇌우일수가 한 30일 정도 돼서 과거 20년에 비해 평균 3배가 높아졌거든요. 피해액도 연간 4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장 박동욱 지금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형준 위원 그것 다 설명하시지 말고요. 일단……

○한국전기연구원장 박동욱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기설계 관점하고요. 두 번째는 보호 대책 관점입니다.

그런데 보호대책 관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피뢰기와 피뢰침과 접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뇌우에 대한 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 성과가 있나요, 지금?

○한국전기연구원장 박동욱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형준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각 시설별로 낙뢰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장 박동욱 예,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시설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한국전기연구원장 박동욱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박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委員 경기도 고양시 일산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제가 올해 말이 되면 6년째 과기위에 있는데 우리 강재섭 대표님이 12년째 계셨는데 저는 6년 동안 상당히 성실히 근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기부총리님한테 물졌는데 과기부 공무원들은 행정직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행정직이지요.

○金映宣 委員 과기부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를 하거나 연구논문을 씁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행정직입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대통령이 총괄하는 업무를 분장 기획해서 내려 보내고 또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지키고 그런 역할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엄밀하게 보면 기획의 역할하고 내부적으로 법률이나 업무 지침이나 성과지표를 지키느냐 하는 업무 감사적인 역할, 그 두 가지가 앞뒤로 모여 가지고 과기부 행정직의 업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주요 업무지요, 그게.

○金映宣 委員 저는 바깥에 있는 과기부 공무원들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통부는 그래도 일반상식이랑 연결되는 게 많아서 그동안에 원칙에 입각해서 엄밀하게 따졌는데 과기부는 정말 고민해도 나오는 게 어려운 과학자들을 뒷바라지하는 거라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어려운 것을 하다 보면 행정원칙이랑 상관없이 실제 현장에서의 기술능력, 애로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행정조직이나 이런 원리를 생각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데……

국감 끝나고 나서 국감 속기록을 한번 공무원들께서 읽어 보세요. 질의응답의 반이…… 국회



의원이 내가 당신의 업무를 알고 있고 이렇게 조사했다라고 해서 죽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는 분의 반 내지는 답변하시는 분들의 일차 답변은 그 질문의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묻기 때문에 누가 100% 맞고 누가 100% 틀린 그런 게 없어요. 서로가 정합이 안 되거나 서로 다른 측면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정합시켜야 되느냐, 어느 방향이 옳으냐, 뭐가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묻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잘못 없다, 위원님이 모르신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전의 오명 부총리께서나 지금 부총리께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게 무슨 쟁점인지는 이해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부총리들께서 실제 실무자들하고 위원들 사이의 중개인 노릇을 꽤 하시는데 오히려 좀더 구체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 기관장이라든지 행정공무원들이 몇 번 지적을 하는데도 고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프린터어21이라는 게 몇 조가 들어갔는데도 데이터파일이 안 되어 있으니 갖고 와라……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데이터파일화하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게 필요하니까 해라 이랬는데 그 후에 함홍차사예요.

그리고 워낙 이게 큰 주제라서 내가 이번에는 대충만 묻고 지나가겠지만 출연연마다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데 노조에 직접적인 자금 제공을 하는 데는 기초연, 핵융합연, 건설연, 해양연, 지질연, 항공우주연, 에너지연, 원자력연구원, 과학재단, 원자력통제기술원, 광주과기원이 있고 복지카드 활용은 표준연, 과학기술연, 천문연, 생명연, 한의학, 극지연, 생산연, 기계연, 재료연, KISTEP, KAIST, 원자력의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복지카드가 규정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가 있고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클로즈드숍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내부 공무원규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지 않게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규정에 따르고 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태파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실태가 파악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리고 오명 부총리 계실 때 고등과학원의 고등과학업무 사업비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고등과학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과기부 모든 분들 계실 때 “이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업비하고 조직하고 다르다. 사업비를 해 놓은 다음에 조직법을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교수가 한 10명 있다고 해서 수학전문대학원이나 수학전문대학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지 않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렇지요? 이런 기본도 안 지키는 공무원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나면 행정법이나 기본적인 업무분장이나 법의 질서나 그것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때 제가 고등과학원은 정말 필요하지만 이것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뭐냐 하면 KISTEP의 경우에 R&D연구인력사업이 나왔는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R&D인력교육원이요?

○金映宣 委員 예, 인력교육원.

과기부의 2007년 예산 중에 얼마 전에 KISTEP을 보니까 교육원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KISTEP 산하에.

○金映宣 委員 그래서 내가 정통부장관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고 부총리님이랑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ICU를 얘기하면서 R&D가 먹고살 길이기 때문에 R&D에 집중하는 게 과기부이고 그것 때문에 과기부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기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분명히 교육원에 관해서 내가 들어 본적이 없는데 떡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것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7년 예산에 산학연 연구인력교육훈련사업으로 55억을 배정받았고 R&D인력교육원 사업비가 44억입니다.

무슨 이런 식으로…… 정말 저는 과기부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라서 험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이런 식으로 기안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여러분들은 부하들한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중적으로 해 갖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갖고 가져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돈을 쓴다 이러면 그것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R&D인력교육원은 KISTEP 산하의 형식을 밟아서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냥 ICU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출연연 2만 여명 연구원들의 연구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리기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전체를 다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金映宣 委員 그런데 공무원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것은 연수원이 아닙니다.

○金映宣 委員 아니, 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하면 안 되냐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것은 좀 특수한……

○金映宣 委員 그다음에 부총리님, 지금 과기부 전체가 R&D인력교육원처럼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느냐의 차이이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출연연 2만 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에 대해서 인접 연구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선 관리기법을 좀 체득하는 게 좋겠다 하는 공통된 의견 때문에 이것을 지금 KISTEP 산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래서 뭘 하느냐라고 했더니 상반기 교육과정 일정 해서 R&D리더스과정, R&D 기술경영과정, R&D기획전략과정, 이게 있는 건데 전파연구원에서 말이지요, 정통부에 전파연구원이 생겼는데 전파연구원에서 자기 자체 연구는 없고 외주 준 연구들이 무슨무슨 방송법 연구, 무슨무슨 전략 연구, 무슨무슨 특별법 연구 이래요.

총리님, 지금 대학교마다…… 총리님, 이것은 부서장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저명인사로서 묻는데요, 지금 대학교들이 옛날처럼 기존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첨단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마

다 산학 그것 해 갖고 특정 대학이랑 또는 특정 기업이랑 관련해 갖고 연결된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특수대학교에서…… 지금 이 정도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의 기초입니다, 교양. 총리님 계시는 연대에도 정보통신대학원에서 이런 것은 기본이예요. A B C D E면 E급에 속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저희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아주 증대시키기 위해서 계층별로 모아 가지고 30명이면 30명, 50명 단위로 해 가지고 전체를 돌아가게 합니다.

○金映宣 委員 총리님, 첫째 사업비를 얘기해 놓고 여기에서 조직에 대한 결정이나 승낙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지요? 사업비 속에 연구원 만드는 것을 감추어 놓고 연구원 만드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감추어 놓은 것은 아니지요. KISTEP 산하에 이미 이런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연구원 만들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연구원의…… 이것이 리서치가 아니라 강의를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또 제한된 이런 분들이, 가령 특수대학원이라든가 가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분들이지요, 대부분이. 그래서 모아서, 이것도 대덕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에서 하다가.

○金映宣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대학원이나 과학경영대학이나 이런 대학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여기 자료로 내 갖고, 정부부처 소속 행정기관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고 감사교육원 농업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 산하에서 연수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학재단에도 상당히 교육프로그램적인 게 많습디다, R&D라기 보다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교육적인 것은 교육 파트로 가게끔 하고 대학교도 좀 살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외부 연구기관들도 살게 만들어 주면서 새롭게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과기부가 돼야지, 지금 있는 교육사업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합니까?

그다음에 여기 해외 R&D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MIT 슬론 경영대에서 하는 거예요. 텍사스대도 텍사스 경영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GE 크로톤빌 연수원은 민간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가랑 상관없고. 그다음 소니 본사에서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과기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재교육을 충분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과기부가 아니라 출연연구원입니다.

○金映宣 委員 아니, 과기부…… 하여튼 광범위한 의미의 출연연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기부가 떠안는 게 과기부 본래의 특징이나 과기부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판 데서 돈 쓰는 것보다는 과기부에서 돈 쓰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런데 과기부도 따 올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과기부에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과기부가 직원들에 대한 순환근무가 안 돼 있어서 능력이 향상 안 되고 있다는 질문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과기부나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랑 연대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다양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과기부 내에 있는 교육사업을 가능한 한 털어 갖고 몽칠 것은 몽치고 프로그래밍화할 것은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 가면 사회적인 분화가 일어날 텐데, 예를 들면 그것을 짝 정리하면서 축소하면서 ‘그중에 꼭 남아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연구원을 만들어 가면 방만해서 안 되고 결국 공통화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기부에서 토론을 잘해서 갖고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해서 그다음에 정식으로 다루어서 안건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하다, 그다음에 이것은 국무회의에서도 토론을 해서 결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장관님께서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각 산하단체별로, 청와대는 청와대대

로 각 부처는 각 부처대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공무원들이 수없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것은 공무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金映宣 委員 아니, 지금 광범위하게 정부조직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그전의 것을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제가 화를 내는 것은 과기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과기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기부장관께서 과학 관련 부처들 회의할 때 2004년 1차 회의에 10명의 장관이 왔는데 최근 27회 회의, 2007년 9월에는 4명의 장관만 왔고 차관도 반밖에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왜 이러냐? 과기부총리를 만들었을 때는 경제하고 과기부총리 둘이 양대산맥이 돼야 되는데…… 과기부 공무원들이 엄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공무 부처……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서 과기부는 90%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처는 50%라고 했다…… 10%는 오차가 날 수 있어요, 10점 정도는. 그런데 과기부가 자기들 일을 보는 것하고 다른 부처하고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과기부 공무원들은 연구를 하고 계시냐고요? 똑같은 행정직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적인, 과기부는 R&D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R&D를 경제나 행정이나 법하고 국제협정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게 과기부 아니에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지요. 그런 정책을 수행하지요.

○金映宣 委員 경력도 남다를 바가 없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R&D인력교육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모시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예.

그리고 들으시는 과기부 공무원님들 한번 국감속기록을 좀 보세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얘기가, 이삼십%는 위원하고 과기부 공무원 사이에 오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원칙 아니냐? 이게 예산원칙 아니냐? 이게 업무분할의 기본원칙 아니냐?” 다른 부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바닥을 기계끔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국감하는

것을.

다음번 국감에서는 예행연습을 좀 하세요, 같이 부서별로. 왜냐하면 과기부가 R&D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 깊은 이해가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통괄하고 하는 데는 좀더 연마가 필요한 것 같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R&D 인력교육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金映宣 委員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교육부에 넘겨 줄 수 있는 건 떠넘겨야 과기부가 계속 어떤 핵심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좀더 제대로 연구하고 국무조정회의를 거친 다음에 일을 진행하세요. 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를 마쳤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10분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유승희 일단 7분씩하고……

○김희정 위원 질의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참석한 위원님들도 많지 않고 하니……

○위원장대리 유승희 그러면 7분씩 하고 부족하신 분은 제가 감안해서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위원 류근찬입니다.

오전 질의에 부총리님께 지난번 대전에서 있었던 일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 주십사,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응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느라고 다른 질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획과 집행을 과기부 그다음에 출연연이 한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언론 보도의 타점이 국회의원도 있지만 출연연에 타점이 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침묵은 늘 금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과기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고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고 또 신문에 분명한 오보가 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그런 왕성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저는 지난번 과기부 본부하고 대전에서 국감을 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대덕특구 문제와 관련해서 과기부 본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대덕특구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료 위원들이 대덕특구사업 추진 실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부총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알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저는 이 같은 지적이 과학기술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 모드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 주요사업으로서의 대덕특구에 대한 애정 어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본부 감사 때 부총리께서 “대덕특구가 성공모델이 될 때까지 대덕특구 육성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라고 밝히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성공모델로 확립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덕특구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대전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중·저준위 방폐물이 원자력연구원 안에 쌓이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류근찬 위원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차 보도가 됐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보도가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나 방법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과기부가 미동도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대전 거기에 적재돼 있는 방폐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부총리님 아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약 2만 5000……

○류근찬 위원 200리터짜리 2만 5000여 개 드립

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있다 그게 실체인데, 2만 5000여 드럼이 어느 정도 양이나 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고리에는 저장량이 3만 6000이 있고요, 영광발전소가 1만 7000, 울진 1만 3000, 월성 6400, 이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2만 5000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0만 드럼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분의 1 정도 와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류근찬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시설 안에 이게 적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주민들 몰래 야적된 상태 비슷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 말입니다. 좀 표현이 과장되었을지 모르지만, 야적이라는 것이 과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주 방폐장 건설계획을 보면 야적이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요? 보통 지진 강도 6.5에도 견딜만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벽체를 포함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려는 것이 경주 방폐장인데 지금 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는 방폐물이라는 것이, 저장된 상태가 무슨 창고 같은 데에 그냥 놓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작년 국감 때 아마 방폐장 문제 때문에, 오명 부총리셨구먼요. 저하고 상당히 큰 디베이트(debate)를 한번 해 봤는데 그 방폐장 부지부터 안전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까.

그리고 그게 선정된 후에 그 지역에다가 정부가 엄청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경주에다가 지원사업, 한 55개라고 합니다. 그게 한 3조~4조 원에 달하는 55개 정도의 지원사업을 주고 한수원에서만 3000억 원의 특별지원 그다음에 200ℓ 드럼당 63만 7500원의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한수원 본사를 이전시키고 컨벤션센터·다목적시설·에너지박물관 건립, 여기에다가 국도·지방도의 우회도로 개설 지원, 양성자가속기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경주 쪽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10만 드럼을 보관할 수 있는 방폐장을 신축하도록 부지로 선정한 대가로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대전의 경우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 4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는 대전에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주

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난번에 대전시민들이 얘기하는, 그 보도는 보았습니다.

○류근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원자력연구원 이쪽 지역, 대전 일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몰래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요? 경주에 방폐장을 지어주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2만 5000개 정도의 드럼의 방폐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소외되었다, 아무런 혜택도 없다, 위험에 노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직접·간접 보상 조치방안을 우리 정부가 마련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경주는 2010년 이후부터는 거기다가 영구조치할 거고요. 지금 대전은 임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류근찬 위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2015년까지밖에 거기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저장용량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늘려야 되는데, 경주가 몇 년도에 완성됩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2010년부터는 거기로……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류근찬 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 용량이 10만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류근찬 위원 10만이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80만입니다.

○류근찬 위원 뭐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전체가요. 경주……

○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 김영식 원자력국장인데요.

방폐장의 전체 규모는 80만 드럼이 들어가는데 1단계로 10만……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10만 드럼 아

니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주 방폐장이 준공되자마자 옮기면 다 찬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옮기면 그 용량이 다 차는 것 아니예요. 1단계 준공되면 용량이 10만 드럼인데 우리가 옮겨야 될 드럼이 10만 드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 김영식 예.

○류근찬 위원 지금 각 원자력발전소마다 차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폐기물보다 다 차는 연도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 2009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리고 대전 원자력연구원 것만 2015년까지 거기다 둘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 김영식 예.

○류근찬 위원 그러면 다 집어넣으면 이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주 방폐장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대전 것은 어차피 2015년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슬픈 운명이다 그겁니다. 대전 것을 1순위로 갖다 놓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근처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을 집어넣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변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실하……

○류근찬 위원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을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류근찬 위원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이 이 정부 임기 말에 낙하산 감사선임이 여전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과기부 산하 8개 상임감사 가운데 5개 기관의 감사가 정치권 인사로 최근에 채워졌습니다. 이게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역시 결과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감사로 내려오더라 하는 것,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우연과 관련된 겁니다.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 부분이 지금 부총리께서도 아실 겁니다만 거의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판매 남는 돈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도, 우주인 사업도 이 돈에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상판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MOU 관련, 지금 수없는 MOU를 우리 출연연들이 국내외적으로 계약하는데 후속으로 성과를 거두는 결과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MOU가 단지 형식적이고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하는 데 급급한 도구로 변해버렸다 하는 부분은 다시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서면질의하고요.

기상청, 제가 지난번 기상청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4년 전부터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하겠다 하는 계획을 해마다 감사 때마다 얘기하던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그렇게 추진력이 없어 가지고 믿을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상청장님, 그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 실정에 맞게 통폐합해서 하든 승격시키는 문제는 빨리 매듭지으셔야 됩니다.

○기상청장 이만기 예, 지금 그 연구가 거의 끝나 갑니다. 그래서……

○류근찬 위원 아니, 그게 맨날 연구예요. 지금 4년째 이상 연구입니다. 굉장히 연구를 오래 하시는데……

○기상청장 이만기 그 연구가 끝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청장 이만기 예.

○류근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류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 위원 민주신당 의정부울의 강성종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적을 한 것 중에서 부총리가 “시정 또는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지요.

○강성종 위원 또 전직 부총리가 답변한 사항도 현직 부총리가 이행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아서 타당성 있는 것은 집행해야지요.

○강성종 위원 타당성이 아니라 규정에도 그제 나온 거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사업이나 프론티어 사업단 같은 경우가 국감에서도 지적되고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고 그때 당시 부총리께서도 시정 또는 개선을 하겠다고 충분히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게 규정에도 있는 얘기이고 또 개선하겠다고 하는 방법들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게 3년 전이고 4년 전에 얘기했던 거라면 저는 국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도 지적했었던 그런, 지난 몇 년 동안 프론티어 사업단들의 사무국장이 우리 과기부 출신 퇴직자들로 버젓이 채워진다는 부분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가 국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과기부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국감은 요식행위이고 부총리는 임기 끝나면 가는 사람이고’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이런 발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태까지 부총리들이 다 장악력이 없어서 제대로 조직들을 장악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4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희정 위원도 데이터 오류나 이런 자료에 대한 부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도 부실하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규정도 어기고 이게 변함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침묵하는 게 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류근찬 위원님께서…… 이런 글도 있습니다. ‘비굴한 침묵’이란 그런 글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정말 다시 제가 여기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에도…… 4년 내내 제 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니다. 한 번 간사할 때 여기 앉았고요. 다 이 자리에 앉았어요. 4년 내내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기부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니까 정말로 이제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 중인 우주사업 6개…… 과학기술위성 2호와 통해기위성, 아리랑 3호, 아리랑 5호, 위성발사체, 우주센터 건설 이게 추진하고 있는 6개 맞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지금 6개 모두가 다, 이 사업들이 항상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 첨단 우주사업은 특징이 사업변경하는 게 특징인가요? ‘첨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첨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말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개념이 좀 모호해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보면 사업만 변경하면 꼭 돈이 떨어져. 꼭 사업하면 돈이…… 위성발사체 같은 경우 2차 변경을 했는데 1460억이 증액되고, 한 40%가 최초 계획에 의해…… 우주센터 건립 같은 것은 3차 변경을 하고 나서 사업비가 1824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140%가 되었고요. 과학기술위성 2호는 2차 변경을 하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는 2차 변경하고 5호도 2차 변경하고…… 최초 정지궤도위성은 1차 변경하자마자 678억 증액되고요.

2005년, 2006년에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더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정말 우리 과기부에서 우주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찬 사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이런 슬로건을 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많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자부심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본 위원이 과기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몇 번 제지인들이 물어봐요, 우리 땅에서 올린다는 것 언제 올리느냐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한껏 기대만 부풀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공격당하는 게 참여정부가 ‘어떤 전시행정이다, 어떤 실적 위주다’…… 저도 참여정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전체가……

정확한 것들을,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문화관광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도 아니고요. 그러면 정확한 것들을 해 주어야지 되는 건데 침단을 얘기한, 다른 것도 아니라 우주에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

발사체와 위성체와 우주센터가 항상 틀려지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또 최초부터 지금 2년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다, 과학기술 위성 2호하고 발사체하고 센터 이 3박자가 맞아 야지 다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강성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탑재체는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발사대만 지금…… 로케트는 지금……

○강성종 위원 그렇지요. 위성 제작은 다 준비되었고 그래서 지금 KAIST에 보관되고 있다고 그랬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서 지난 30일날 러시아 장관이 와서 저랑 같이 내려갔다가 확정했습니다.

○강성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정말로 좀 조합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주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게끔…… 우리 과기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것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통해기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기되는 이유가 보니까 궤도시험기간 미포함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에서 보험료 미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탑재체 개발비 등 예산 증액에서 부처 간에, 물론 4개 부처가 움직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것이 안 되니까…… 위성을 올리면 당연히 그 자세 안정, 궤도시험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고, 또 보험료나 개발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혁신본부 안에서, 또 부총리로 승격됐으면 미리 준비했으면 간단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원인을 기상 때문에 못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인 것이 계산이 미스가 되어서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못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우주과학을 생각하면서 대 국민 홍보에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주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더 이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져야지,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종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폐기물에 대해서,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하고 그다음에 고리본부장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88년 1월 6일로 해 가지고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진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8년 이전의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진에 대해서 안전이 담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진설계 대상 중에서 88년 이후에서도 지진 1지역과 지진 2지역이 있습니다. 지진 2지역에 있는 대상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88년 이후면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임시저장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주에 방폐장을 만드는 것, 거기 가기 전에 30년 동안 썩혀 있던 것들이 있는데 내진설계 대상이 된 것 중에서 거기에 다 걸리는 것이 고리 제4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한수원의 고리본부장님하고 얘기해서 결국은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발전도 중요하지만 과기부에서는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 재산이 담보될 수 있게끔 빠른 시간에 고리 4저장고가 내진설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전에 설계된 것들도 고리 1·2·3기 그게 88년에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기부 질의에서도 제가 지질연구원에 부탁드린 것이 우리나라가 지질안전지대



냐, 안전지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고리 1·2·3기의 저장고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법적인 문제는 그래도 하자가 빠져 나갈 수 있겠지만 국민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지은 것도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설계된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만날 선진국, 선진국 얘기하는데 선진국은 방패장이 있어요. 임시저장고는 정말 임시저장고예요. 가기 전에 잠깐 들어가야 되는 것이예요. 20년, 30년 있는 게 임시저장고가 아닙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강성종 위원 그러니까 법령적인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일단 4호기는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고리본부장도 마찬가지로. 4호기에 준하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는 1·2·3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1지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강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 위원 홍창선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는데 올림피아드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이 되고 있다, 이공계 수학이든 물리·화학 올림피아드 특수훈련을 받고 그쪽에 재능 있는 사람을 조기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의대, 치대 이런 데 진학 수단으로 자꾸 늘어간다, 그런 문제점을 과학기술부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통계도 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지요.

○홍창선 위원 그래서 요즘에 고급인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호텔에서 기업인들도 모이기만 하면 고급인재 양성이 어찌고저찌고 그러면서 영재학교 같은 것을 전국에 몇 십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니 이래요.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신문이 쓰고, 제가 보기에 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또 어떤 분은 빌 게이츠 같은 사

람을 우리도 빨리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을 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 중퇴하고 이게 아니다 해서 마이크로 소프트……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 위원 지난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증도 많이 했더니 명예졸업, 대학을 중퇴했으니까 졸업장을 주었더니 또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얘기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쌍벽을 이루는 애플사 창업한 스티브 잡스 이 사람도 똑같이 중퇴자예요. 다만 빌 게이츠는 아버지가 집안이 괜찮고 이 사람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관둔……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엇그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국과위 했습니다. 엇그제가 아니고 서면결의했습니다.

○홍창선 위원 회의가 아니고 서면결의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홍창선 위원 그러니까 토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난 10월 초 국과위 때 영재문제 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러면 그 문제면 10월 말까지 해서 합의한 다음에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홍창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결의라는 것은, 사실 모여서 회의도 안건이 많으니까 하나 하나 읽지도 않고 그야말로 땅땅 두들기고 가는 게 그 위원회라는 것을 본인도 참석을 해 봐서 압니다. 듣고 우리가 다 토의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서면결의 그 안에 보니까 앞으로 과학영재학교의 추가 신설·지정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창선 위원 썸데이……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할 사항이다……

○홍창선 위원 그런데 막연히 금방 하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그것은 좀 우습네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교육부와 저희들 간에 협의된 것이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홍창선 위원 지금 여기 과기부 간부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보직이 자주 바뀌니까 2년 이상 일에 관심 갖는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이고 차관이고 2년 이상 하는 분이 별로 없고 국장이고 과장이고 2년 이상 보직을 안 주고 실무자도…… 그런 얘기를 실제 공무원이 실토합니다.

제가 조금 긴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영재학교가 언제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부산 것 말이지요?

○홍창선 위원 과학영재학교는 그것 하나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2003년……

○홍창선 위원 그 당시의 실무 국장은 벌써 없을 테고 당시 실무 과장님은 지금 어떤 분이예요?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협력국장 김차동 네, 접니다.

○홍창선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부총리께서 전부 답변하시니까 뒤의 분들이 심심해서 졸고 자세도 그렇고 그래요. 가끔 실무자한테 하겠다 그래야지 긴장하고 들을 텐데……

이 과학영재학교를…… 제가 보기에 담당 국장은 이 자리에 없고 담당 과장이 지금 협력국장…… 우수하니까 또 그것만 너무 오래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대요.

아무튼 그 당시 과학영재학교를 세우겠다고 부산에서 약속을 해서 하다가 이제는 돈을 대는 게 부담이 된다, 지역이 어떻다 해서 약속을 어기고 과학고등학교를 또 만든 거예요, 사실 장영실과 학교고등학교가. 그래 놓고 이제 떠넘기려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생생히 같이 고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영재학교가 어떻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사과정 그런 게 이 속에 있더라고요. 뉴스에 지금 보니까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 그러면 그것을 진작 해 주지 그동안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며칠 전에 그 지역의 교육위 모 국회의원이 이것을 묻기에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 의견이 뭐요?” 그랬더니 “말도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들은 바가 없소” 그랬는데 여기 안전에 있고 오늘 인터넷에 다 되어 간다고 떴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로 누군가가 선전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파이브스타 호텔에 앉아 가지고 이래야 경쟁력이 산다 어쩌고 이러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것이 이런 데 적혀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이 있고서 이런 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 위원 시계가 또 소리를 크게 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홍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변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못 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덕R&D특구와 관련해서 대덕R&D특구가 당초에 정부가 약속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기업 유치라든지 외국인 전용단지가 성공했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 전용단지가 결국 실패해 가지고 일반 분양하고 말았다, 그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것이 대덕R&D특구의 앞을 어둡게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짜 총력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유치 못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대덕R&D특구를 R&D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려면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덕R&D특구 자체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의 성과 확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참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타 지역으로의 확산은 아까 말한 대로 대덕R&D특구가 지난 30년간의 R&D 역량이 결집되고 그 성과가 축적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인근지역하고 협력한다면 협력할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 R&D특구본부 이사장도 그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대덕R&D특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충청북도의 오송·오창 산업단지라든지 충청남도의 아산 탕정산업단지가 같은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교의 협력체계도 좀더 강화한다면 또 다른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NIS 체제가 되면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10~20% 올리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 서면답변 내용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이 과학기술부의 서면답변을 작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방형 R&D 전략에서 독자기술을 추구하는 창조형 R&D 전략으로 전환 시 예산투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어찌고저찌고 해서 ‘투자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쓰신 분, 담당국장도 좋고……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연구개발조정관 박항식 예, 제가 감수했습니다.

○변재일 위원 R&D 투자 효율성의 측정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R&D 투자의 효율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요?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연구개발조정관 박항식 특별히 정량화된 계산방법은 없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20%를 증액시켰다고 했습니까?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연구개발조정관 박항식 예를 들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거나……

○변재일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일단 현재 R&D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군데에 요구했습니다. 잠재성장률 측정방법에서 소위 말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서 노동생산성 증가분하고 자본생산성 증가분

을 빼는 것이 기타생산성 증가요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R&D 투자 부분을 또 뺏아야 됩니다. 복잡한 형식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쓰려면 직원 중에 최소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 가지고 중복투자 방지하면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행정을 하니깐 그다음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도 못 하고 답변도 못 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조정관님 말고 산하기관장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산하기관에서 오신 분 중에서도 R&D 투자의 효율성 계산법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R&D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변서도 쓸 수가 없거든요.

과학기술부는 직접 R&D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R&D 투자예산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성과관리하는 데란 말이지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관리 메커니즘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 이런 뜻을 이해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상식적으로 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처에 있던 국장급 모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생활도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모든 세상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해 가지고 10조에 달하는 R&D 예산을 관리하려는 생각은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과기원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설립 문제하고 광주과기원 IMS 프로그램사업 지원 문제, 미래융합기술 관련 지원 확대 문제, 이 세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서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제회 이사장님 나와 계시나요? 이게 증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종용 증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좋습니다.

이번에 600억 증액한 것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徐相箕 委員 그 속에 ADD 연구원들이 포함 안 되었다고, 원래 공제회 회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600억 수혜 대상자에 안 되어 있다고 그쪽에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을 결국은 포함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徐相箕 委員 당연하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럼요.

○徐相箕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답을 못 들었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았는데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공제회 쪽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느냐 하면 과이가 하나인데 이것을 결국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徐相箕 委員 그러면 아예 공제회 멤버로 허용하지 말든지, 같은 멤버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같은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분란이 없도록 부총리님께 교통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徐相箕 委員 그리고 아까 기술유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과제를 받으려면 심의단계부터 어쨌든 간에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제 같은 것은 정말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부총리님이 권한을 가지고 예산이 10조쯤 되니까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연구비를 쥐서 특허가 나올 때까지 혹은 생산이 될 때까지 새도우 프로젝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키울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신청하는 과제마다 전부 1년 전에 공개되고 할 때마다 공개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다 공개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큰 국가를 움직이다 보면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부총리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글썽요, 지금 더군다나 투명성, 투명성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과학재단에다가 제가 최석식 이사장 오면서 부탁한 것이 과학재단에서 정책연구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정책과제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허까지 이야기하니까 아주 실질적인 과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상당기간 보안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계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 심의가 아니고 심의를 하기는 하되 어느 수준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는 과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말씀은 연구의 보안 문제……

○徐相箕 委員 예, 그런데 지금은 연구과제를 내는 순간에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시간이 조금 흘러서 잠잠합니다마는 이번 KAIST의 테뉴어, 박수를 치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지금 긍정적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저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런 조치를 인문계에서 먼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것을 이공계가 먼저 시작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 출연연구기관의 신입소원 채용한 것을 다 받아 봤거든요. 받아 보니까 신입소원은 무조건 주니어들만 다 들어왔어요. 정말 세계적인 혹은 15년 이상 외국이든지 국내든지……

제대로 연구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제는 좋지만 우리 내부에는 아직 사람이 없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기관장이 혹은 과기부에서 과감하게 당신은 좀 곤란하다, 이 과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당신이 능력은 있지만

이 과제를 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점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데려오겠다, 또 국내에서 다른 사람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지요. 누구든지 즐기세로 좋다 그래서 딱 해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감히 누가 당신은 안 된다 소리를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고 사람 모집한 것을 보면 그게 반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TO에서 경력자를 신입 연구원으로 채용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KAIST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KAIST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순서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의 순서를 매겨 가지고 못하는 사람에게 데뉴어를 안 주는 것보다도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정말 KAIST가 나가야 될 방향, 5개 핵심과제가 있으면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이 필요 없느냐 해서 5개에 다 데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데리고 온 다음에, 그게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는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일리가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밖에서 데려오는 게 더 급하지 있는 사람 서열 매기는 것은…… 그게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끌고나갈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게 첫째이고 지금 있는 인재풀에서 좀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서열도 매기고 하는 게 두 번째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기부에서도 신입소원 모집하는 TO를 줄 때 기관장들한테 반드시 요구를 하십시오. 저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신입소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데리고 왔다는 게 앞으로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연구소도 발전이 없고 대학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되든 안 되든 예산이 얼마가 들든, 예를 들어서 기관마다 연구원 TO를 10명 주면 그중의 한 사람은 외국의 석학 혹은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를 모셔 와서 프로젝트를 맡기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통계를 보면 기관장보다 더 잘난 사람을 데려온 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주니어, 신입소원…… 미국에서 하는데 아주 장래가 유망합니다…… 장래 유망한 사람 가지고 지

금 컴플리트(complete) 못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장래 유망한 사람 데리고 와서 키워 가지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에서 예산이 얼마 증가되었다, 그것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부터라도 정말 돈을 얼마 줄 테니까…… 10조의 1% 해 봐야 얼마입니까? 1000억 아닙니까? 0.1% 같으면 100억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뒤집어 씹습니다. 0.1%라도 집어넣어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오는 풍토를 만들고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발상의 전환과 그런 큰 가이드를 하는 것이 과기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로 하시고……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이번에 KAIST에서는 외국인만 열셋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니어 중에서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데려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徐相箕 委員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우면 제가 말씀드릴 것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지금 출연연구기관이 받아 보니까 전부 그래요. 전부 훌륭한 후배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훌륭한 후배들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10명 중의 1명, 10명 중의 2명은 우리가 정말 유능한 인재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국적, 피부색깔, 대가를 불문하고 데려오자’ 그런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도 그걸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거지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가이드를 해 주시는 그런 게 과기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한나라당 김희정입니다.

제가 안전불감증 문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던 것 같은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 온 검토보고서 아까 쉬는 시간에 읽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읽어 봤습니다.

○김희정 위원 누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잘못보다도……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아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질연구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최대 변위 규모 6.5~7.4, 파열길이 규모 4.7~7.1로 지진 부분에 대한 의견이 왔는데 아까 담당국장이 끼어들어 가지고 6.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가 지금 설명들은 것은 6.5~7.4 그 규모와 파열길이 규모 4.7~7.1을 포함해서 시뮬레이션해서 6.0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한수원에서는 6.0이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여기 지금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서는 6.0을 산정하였으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는 6.5~7.4, 4.7~7.1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중치를 더 부과하는 게 좋다는 더 확대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여기 지금 있습니다.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한수원 보고서 말고 새로운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수원 보고서를 들고 위증하도록 내버려둬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위증은 아니지요, 지금.

○김희정 위원 한수원 보고서를 잘못 얘기한 거라고 아까 와서 얘기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수원……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수원에서의 보고서를 한쪽 얘기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질연

구원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지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질연구원에서는 그 숫자를 벗어나는 숫자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딱 6.0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5~7.4, 4.7~7.1……

○김희정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제가 아까 6.5~7.4라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위원장님, 틀렸습니다. 6.0이라고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은 한수원……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수원이 아니라 지질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딱 잡아땀습니다. 아닙니까? 아까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누가 딱 잡아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희정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보고서가 왔는데 나한테는 6.0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왜 엉터리로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도대체 무슨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무튼 오해가 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김희정 위원 양해가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지요. 왜 똑같은 보고서를 놓고도 지금 여기 뻔히 있는, 사인까지 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엉터리로 말씀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한수원은 6.0,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검토의견은 6.5~7.4……

○김희정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한수원의 보고서가 6.0이라고 왔는데 그 부분을 수정한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수원 보고서 말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숫자가 얼마라고 왔는지 부총리님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최대변위가 6.5~7.4 그리고 파열길이가 4.7~7.1인데 이것을……

○김희정 위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읽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최대변위와 파열길이로부터 균열을 추정할 때 추정치의 신뢰성을 고려하면 최대변위로부터 구한 규모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김희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지요.

○김희정 위원 부총리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얼마를 부여하느냐, 이 보고서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각각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다르지요.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지요.

○김희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위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우리 문 국장이 위증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정 위원 아까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속기록을 확인할까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위증할 리가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뭔가 오해가 돼서 한 얘기일는지 모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위증이든 오해든 대답을 잘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가 들을 때는 그때 지질연의 검토의견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수치를 불렀을 때 “저희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6.0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

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문 국장이요?

○김희정 위원 예.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문 국장이 “그런 자료는 우리가 낸 게 아닙니다”라고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서 숫자를 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희정 위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진짜 그것은…… 문 국장……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속기록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녹화테이프 틀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래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보고서 받은 적 없는데 혼자 엉터리로 읽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럴 리야 없지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저한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가 할까요? 지금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 국장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김희정 위원 누가 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셔서 사과해 주십시오.

국감장에서 위원이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소위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도 다 제 밑에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차원에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 손에 의해서 부총리님께 보고서가 전달된 것도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부총리님께 복사해 드리기 전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어야지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래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관공비 사용과 관련해서 낙하산 감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고 바로잡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잘못된 집행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모 감사기관에는 감사원 출신 감사가 와서 대부분의 관공비를 감사원 직원들 경조사비로 다 써 버렸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상 딱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출신 감사가 와서 청와대 탁구팀하고 밥을 먹는 일까지 있었다.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예를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서면답변서라고 온게 제가 딱 지적한 그 청와대 탁구팀하고 밥 먹은 22만 원에 대해서만 자진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문제……

○김희정 위원 일일이 다 불러드릴까요? 청와대 탁구팀 이외에 다른 것도 다 불러드릴까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됐습니다. 됐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도……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과기부 자체 차원에서 감사한 바가 있고 또 조치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조치 이후에도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 후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출신 감사는 와 가지고 업무추진비 650만 원 중에서 331만 5800원을 전부 다 감사원 직원 경조사비로 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 탁구팀 이외에도 청와대 정기모임, 청와대 행정관 회의, 청와대 업무협의, 청와대 행정

관 회의, 청와대 업무협의, 이런 제목으로 전부 다 써 버렸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친정 식구들이랑 밥 먹는 데 감사업무를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는지, 그래서 제가 향후 조치가 어떻게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딱 누구하고 밥 먹은 것 중에 이상 있다고, 청와대 탁구팀 이상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것 달랑 하나 ‘반납하겠습니다. 나머지 것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저희들이 금년 6월 말에 경비집행 가이드라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다시 우리 본부에서도 감사팀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는 적당한 기회가 지금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적당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금년 내이지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委員 고양시 일산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한숨 돌리기 위해서, 예리한 질문부터 할 작정이었는데 부드러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과기부가 R&D를 책임지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홍창선 위원님처럼 과기부 전문이신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맞지는 않더라도 행정이면 행정, 언론이면 언론 또 교육사업이면 교육사업 입장에서 ‘아, 이것은 고칠 수 있겠다. 다듬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유감인 것은 한 5년, 6년 전부터, 그전에는 사실 과기부가 어렵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이래 갖고 위원님들도 참 난색을 표하던 위원회인데 참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벌써 많이 짚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책임도 지고 있지만 과기부 직원들 같으면 그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창선 위원님이신가는 과기부가 2년밖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 전보 제한기간이 2006년부터 과장급이 1년 6개월, 국장급이 1년으로 해서 잦은 이동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경우에 지방조직이나 지방 파견근무가 없는 고립된 인사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재직을 주로 하고, 정책보좌관은 52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자력국장이 47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단기 재직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분야에 머물러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행정부처마다 트렌드가 달라지는데, 저희도 질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질의 응답을 하기보다는 응답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요즘에는 민간기업에도 파견 갔다가 돌아오는 공무원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과기부 직원들이 순환할 수 있는 데, 파스퇴르연구소 같은 데는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

○金映宣 委員 그런데 예를 들면 KISTE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젝트도 많고 또 과학재단도 그렇고 해서 계장에서 과장되기 전에는 산하단체에 가서 한 1년 정도, 한 두 군데 정도 일하고 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실제로 연구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경험을 쌓는 것이, 꼭 과기부가 아니더라도 현장의 경험을 쌓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사업을 가능한 한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형성이 됐거나 프로그램화됐으면 교육기관이나 연구소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배우면 그 프로그램의 교육기법이나 콘텐츠랑 교류하게 되고 또 다른 데랑 조인해서 만들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과기부에서 하게 되면 R&D 성격을 잘 살리면

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은 좋은 점이지만 사실은 지금 과기부가 갖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오히려 저지되고 또 과기부 직원들이 나가서 딴 데랑 연결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장애를 일으킬 수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계속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외부랑 또는 과기부 내부에서도 순환보직 체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위원님, 제가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R&D교육원이 생기게 된 배경이 과기부는 산하에 과학기술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야말로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룹별이라든가 계층별이라든가 심층 토의한다든가 그런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강릉에 KIST 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강릉분원과학기술연수원이 만들어집니다. 착공을 곧 할 텐데 그 센터가, 이제 일종의 R&D 교육 같은 것도 거기서도 우리가 모여서 하고 또 대덕에서도…… 지금 대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양하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委員 부총리님, 취지에 대해서 첫째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되었거나 시스템화되어서 교육적 성격이 강한 것은 내보내야 된다, 그게 지식을 내보내는 과기부 입장에도 맞고 R&D에 집중하는 과기부 입장에도 맞고 교육기관이랑 교류하면서 외부의 협조나 지식을 끌어들이는 것에도 맞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것은 부총리님께서 두루두루 의견을 모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 취지에 있어서 총리님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정부 체제가 지금 방만화되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있고 정부기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논란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기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위법입니다. 사업비를 받았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육을 반대하는 이유가 과기부 직원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다른 것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에도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한 질의로 부총리님이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10분 동안 새 질의에 집중을 못 했어요. 제 질의시간을 뺏어가신 거라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언제요? 지금이요?

○金映宣 委員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죄송하게 됐습니다.

○金映宣 委員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교육원 문제는 아까 얘기가 끝났고요. 지금은 과기부 직원들이 과기부에 너무 매여 있어서 다른 부분에 지식을 내보내는 거나 받아들이는 거나 능력을 함양하는 거가 대책이 안 서 있다 지금 그 질의를 한 거거든요.

(유승희 간사, 홍창선 위원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래서 지금 그 10분을 부총리님이 다른 주제로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듣고 싶은,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사적으로 이해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럼요.

○金映宣 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과 부총리님 또 여기에 있는 차관님이나 국장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음번에는 지적한 대로 업무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한 6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한 40%는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질의할 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가질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아까 연구개발평가에 대한 문제를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BK21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승희 위원 이공계 대학생을 지원하는 BK21의 경우에는, 그 평가에 대한 것인데 지금

학술진흥재단의 경우 논문 특허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인해서 14개 사업 중에 3개가 '아주 미흡', '미흡'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BK21 논문이 평가기간인 12월에서 3월에 맞춰 나오지 않고 특허출원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KISTEP의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가지고 한 해 2900억 원 예산 중에서 6%인 17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에게 BK21은 장학금이나 연구실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되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연구분야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위 15%가 강제 탈락하는 그런 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과기술부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을 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KISTEP, 평가기관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각각 사업에 맞는 평가기준을 설립하고 그 성과 부문에서 SCI 여부라든지 특허 정보 등을 보다 쉽게 검증하기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평가기준 말이시요?

○유승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만큼의 인력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전문적인 역량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더 면밀한 노력을 기울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현재 과기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고착된 평가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성과지표를 저희들이 한 164개를 내보냅니다. 제공하고 사업 담당자가 그중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쓰거든요. 그만큼 신축성은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별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아니, 개선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편이 아까운, 굉장히 아쉬운 판에 2900억 원 중에서 6%가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현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대책이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보완해 나가도록……

○**유승희 위원** 예, 보완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유승희 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이 비례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 성과가 배출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과기부가 좀더 각별한 애정과 각별한 집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특히 현장의 여성 과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실제로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은 필요 없고 중장기 계획과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을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뇌 연구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웰빙 내지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연구지원비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미국의 80분의 1, 일본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전문인력, 시설장비, 연구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가 뇌 연구 전문기관을 설립할 시기가 성숙되었다고 보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예산이 국회에서 반드시 세워 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국회에서 예산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더 면밀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다음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민과학지식 DB 구축사업 관련한 질의와 대덕 공동관리아파트 처리 관련한 질의 그리고 연구실 안전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유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먼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 위원** 아까 폐기물저장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일반건축물상에서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고 허가가 무엇으로 나는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강성종 위원** 중·저준위가 일반건축물상에서 허가가 무엇으로 나는지 아시는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참고이지요.

○**강성종 위원** 참고라는 게 중·저준위가 참고로 나오는데 이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으로 해서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참고라고 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참고라는 얘기는, 분명히 위험물은 참고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험물은 참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물은 참고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지 위험물이 참고에 적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심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고준위 같은 경우는 뭘로 하느냐 하면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나는 공작물의 뜻이 맨 처음에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조명도 없고 창문도 없는데가 공작물이에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수조.

○**강성종 위원** 굴뚝이나 제방 같은 것을 공작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관심이 그만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좀더 관심과, 서로 간에 법령 때문에 이것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소 하나 더 옹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물론 부총리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국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과학자교류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경비부담을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를 빼고는 파견국인 우리나라가 전액 부담을 하고, 기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는 파견국인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접수국에서 하는데 33개국이 매년 80에서 100명이 과학자교류사업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6년까지를 보니까 절반 가량이 다 어디 가는지 알겠지요?

(홍창선 위원, 유승희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일본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요.

○**강성종 위원** 일본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단기 1개월 코스인데 단기 1개월 코스를 일본으로 갈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든 어떤 폭넓은 교류가 되겠느냐, 오는 쪽도 마찬가지로 일본 쪽으로 거의 편중되어 있어요, 3년간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데는 지난 3년 동안 전무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교류 자체가 규정조차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실 것이라면 그냥 여행 보내는 게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여행 보내는 게 아니면 좀더 깊이 있게끔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기왕 할 경우라면 쓸 것은 쓰고 안 될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야 될 경우라면 친목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좀더 폭넓은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는데, 하나는 기상청 소관으로 해서 지금 APCC 아시지요? APCC의 국제기구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화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13억에서 15억을 요구했는데 6억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화할 것은 하

자,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기존보다도…… 작년에 10억으로 해서 부산에서 3억을 해서 13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6억을 빼 가지고 지금 9억밖에 못한다면, 기상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스스로도 아·태지역이나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기구로서 발돋움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폭염에 대해 한 마디 드리는데, 저도 법을 냈지만 폭염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자연재해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을 보았을 때 미국에서 사망자수를 최대로 낳은 것이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네이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폭염이라고 하고요.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분들이 노인들이십니다. 고령화추세에다가 기상이변으로 폭염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연재해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디까지 자연재해로 보느냐 보상의 문제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범망 테두리 안에 들여오지 못하고 영원히 법 뒤에서 돌아다니게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가져서 자연재해로 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강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대덕특구 문제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예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6600억을 확실하게 범으로든지 어떻게든지 보장을 한다, 그리고 특별히 연구소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원래 계획대로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지정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엄두가 안 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랬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내용이 뭔지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온 것을 보니까 조금 그것과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총리님 입장이 곤란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산도 보장하고 연구소를 옹기는 것도 아

니고 해외에서 오는 우수한 인력을 대전 갈 사람을 광주나 대구로 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을…… 그리고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그릇이 여기는, 연구기관이 지금 대덕에 30개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徐相箕 委員 그런데 광주, 대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숫자로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파이를 키우면 6600억이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는 길도 있다, 또 나아가서는 대덕은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과제로 채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1 대 1 경쟁은 도저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이라 할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다 잘 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대덕특구 일일이 맡은 안 하겠습니까마는 외국인 기업 유치같은 것 정말 숫자 조작해 가지고 부풀리는 것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우리가 정치논리나 감정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발전하고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이런 특구를 통해서 연구가 기업으로 이어지고 기업이 생산으로 이어져서 경제에 기여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동안에 뭘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힘을 합쳐서 안 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서상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연 감사 과정에서 전자통신연구원은 감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출연연이 다 자체 수입이 굉장히 축소 편성되어 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라든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이 그만큼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것이 편법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 수입이 생긴 것도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에 먼저 충당을 하고 연구개발비에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도 어겼어요.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는 자체 초과수입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직원들 능률성과급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출연연 전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지출에 대한 것만 살펴보시지 말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 본부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김희정 위원 다음에 문제로 인식하나 결과치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인데 이번에 과기부와 기여처가 재정사업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하고 기여처 평가점수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워스트 10이 있어요. 그중에 과기부 사업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뭐냐 하면 바로 이공계 장학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에서는 그것을 100점이라고 해서 냈고요, 기여처에서는 5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다른 질의서는 받아 보시고 제가 하나 종합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과학재단도 이제 우리 산하기관이고 ICU는 정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양쪽 기관을 다 제가 감사를 하는데 과학재단에서 ICU에 나가는 장학금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 날짜가 굉장히 부정기적이다, 학기 시작이라든지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지급 금액이 약간 비통일성이다 통일성이 없다, 그다음에 과학재단하고 ICU에 송금된 일자와 접수된 일자가 다르다, 그다음에 기부금 형식이 왜 학생한테 지원한다고 해 놓고서는 ICU재단 발전기금으로 들어갔느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받았어요. 제가 대답을 보고 납득할 만하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 온 것에 보면 왜 날짜가 부정기적이냐 이랬더니 신규 및 계속 장학생 간 지원 시기가 상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계속하고 신규학생들 간에 소위 어떤 수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같은 계속 학생인데도 같은 날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학생한테는 50만 원이 지급됐고 어떤 학생은 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또 성적차이라고 반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학생한테는 34만 원이 지급이 됐고 66만 원, 그러니까 50 플러스 50으로 해서 100을 만든 데가 있고요, 34 플러스 66으로 해서 100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급 날짜도 3월 12일, 4월 26일, 5월 7일, 5월 28일, 7월 9일, 8월 23일 이런 식으로 어떤 학기나 무슨 시험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부정기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 투 쓰리를 말씀드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ICU에서 과학재단에서 들어온 명목을 홈페이지에 실어 놔다가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과학재단에서 들어온 돈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부총리님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면질의는 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자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삭감해 가지고 도저히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APCC 한국에 유치를 하고서도, 조금 전에 강성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국제기구를 한국에서 유지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委員 경기도 고양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金映宣 委員 1998년에 정책실명제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에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도 없었지만 과기부 내에서 연구과제가 연구책임자에게 주로 연구가 되고 책임자의 이직·퇴임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되고 나서도 과기부 직원은 과연 그게 누가 책임이 있는냐, 이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와 같은 입장에서 총리님, 1996년에 고등과학원 때 사업비를 먼저 따낸 다음에 사후에 조직법을 제정해서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시고 이번에 KISTEP에서 인력교육원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돈을 쓰면서 연구원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또 고등과학원에서 새싹미래과학자 캠프사업을 했고 이것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2002년에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입안하고 추진했는지를 밝히고 징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안 해 주시면 제가 감사원이든지 공급유용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런데 지금 징계 말씀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金映宣 委員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金映宣 委員 징계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것은 도대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로 된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하여튼 차후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따져 나가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지금 주십시오.

○金映宣 委員 그것에 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기자재 구입시점 관련 업무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R&D를 위한 기자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3년간 산하기관의 기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대량의 예산 몰아치기가 연구 종료시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에 두 달 앞두고 88건에 10억

원, 2005년에 종료 두 달 앞두고 82건에 8억 원, 2006년에도 14억, 2007년에도 21건에 3억 5000여 만 원이 두 달 내에 구입되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종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은 연구에 기여치 않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의 개정 시도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개정 시도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데요.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정산지침에 아시는 것처럼 2개월 이내에 구입한 기자재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것을 지금 ‘연구 종료 후’로 내용을 바꾸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까?

○金映宣 委員 2007년 8월에 개정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고,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의 애로점은 있지만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제가 아까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입니다. 기획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다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에요. 공무가 공공 ‘공’자가 아니라 빌 ‘공’자 공무가 되는 거예요, 행정법에 따라서, 업무지침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되지 않는 것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량상품으로 리콜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계획을 세워서 예측모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R&D 부서에 맞는 것이지, 지금 계속 시정이 되지 않는 데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예, 합리적인 말씀 같습니다.

○金映宣 委員 나머지 기후협약에 관해서 부총리님께서 좀더 진두지휘를 하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기부의 조율권만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과기부 공무원들이 공무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기서 더 발전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부총리님과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이지 부총리 만들었다고 부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희 김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애정과 열의를 가지신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제성장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외부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 한국생명연구원 등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소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외 우수 R&D센터의 유치와 관련하여 기술 이전 실적이 전무하거나 단 1건에 불과한 기관이 50%에 이른다는 지적과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사무국장 직위에 대한 투명한 인사를 촉구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연구개발사업비의 축소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 미진이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 활용도 저조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이원적인 지원과 관리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사업비의 증액이 요구된다는 주장과 기관평가 결과를 연구자 개인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반에 대한 성과 부풀리기를 지적하는 내용과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들의 의대진학 과다와 관련하여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정책의 부실을 지적하였으며 과학기술경쟁력 순위의 과장 및 대국민 오도를 경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과학기술부와 기상청 등 관련 기관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피감기관에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

질의 도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부총리님 그리고 기상청장을 비롯한 수감기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 위원(17인)

강성종	김근태	김영선	김태환
김희정	류근찬	박성범	박형준
변재일	서상기	신상진	심재엽
유승희	유시민	이종걸	임인배
홍창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	춘	엽
전문위원	정	구	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과학기술부			
부총리겸	김	우	식
과학기술부장관			
차관	정		윤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박	종	구
연구개발조정관	박	항	식
정보전자심의관	차	양	신
생명해양심의관	김	성	수
기계소재심의관	권	혁	동
에너지환경심의관	이	문	기
과학기술정책국장	남	진	웅
기술혁신평가국장	전	상	현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박	종	용
홍보관리관	이	재	영
재정기획관	김	진	경
기초연구국장			
국장	이	상	목
우주기술심의관	김	창	우

원자력국				
국장	김	영	식	
원자력안전심의관	문	병	룡	
과학기술기반국장	이	은	우	
과학기술협력국장	김	차	동	
국립과학관				
추진기획단장	윤	대	수	
감사관	강	영	철	
정책보좌관	권	재	철	
총무과장	편	경	범	
국립중앙과학관장	조	청	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유	성	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	이	환	
사무처장				
기상청				
청장	이	만	기	
차장	정	순	갑	
지진관리관	민	경	식	
정책홍보관리관	이	일	수	
예보국장				
수치예보센터장	홍		윤	
기상기술기반국장	이	우	진	
기후정보화국장	박	광	준	
기상산업생활본부장	정	연	양	
국립기상연구소장	최	광	연	
운영지원과장	최	치	영	
항공기상관리본부장	김	진	국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장	이	신	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장	이	현	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정	연	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김	종	순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최	석	식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장	조	영	화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유	희	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금	동	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	신	재	인	
연구소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권		면	
선임연구단장				
한국천문연구원	박	석	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	상	기	
한국한의학연구원	이	형	주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최	영	락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장	양	병	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정	낙	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채	남	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	태	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백	홍	렬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이	호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나	경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최	문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국보안기술연구소장	박	춘	식
한국식품연구원장	김	동	수
한국전기연구원장	박	동	욱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나	도	선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장	강	호	원